

4·11 총선

진보정치 구현의 기회가 돼야

▶ 3, 5 면

노엄 촘스키

“김지운
마녀사냥 중단하라”

▶ 2 면

타리크 알리 인터뷰

‘아랍의 봄’
이후 미국 제국주의

▶ 6 면

KTX 민영화

KT가 보여 주는
재앙적 미래

▶ 10 면

탈북민 논란

우파의 위선과
진보의 태도

▶ 11 면

발행인_최성호 편집인_최성호
인쇄인_(주)이피디 이송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국제주의,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노동자 연대

Left21.com

제77호 | 2012년 3월 17일 ~ 3월 30일 | 값 1,800원

레프트21

제주 ‘해적기지’ 반대한다

» 관련기사 2, 8~9면

김지운 마녀사냥 중단하라



방송사 공동 파업에 승리를!

» 관련기사 4~5면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말일까요?

“우리 나라에서 그[박근혜]만한 정치인 몇 사람 없다.”
이명박, 벌써 퇴임 후 안전 위한
아부 모드 돌입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의 자기 학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 달라. 기소만 해 주면 내가 여기서...”
나경원 남편 김재호,
주어 쓰지 말란 걸 처에게 못 들었군

“마침 민주당이 우리보다도 더 한심하게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견디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

“기능 간 유기적 협조, 체계적인 수사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대규모 연행자 사법처리로 공안사건 수사 모범 사례”
쌍용차 ‘살인’ 진압을
최고 모범 사례로 뽑은 경찰청

“구럼비 바위의 눈물’이라는데 바위가 무슨 눈물을 흘리나”
한나라당 안형환,
무식한 건지 메마른 건지

“북한의 이명박 표적 훈련 기사에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는데, 1위 ‘참 혼 혼한 기사입니다’, 2위 ‘역시 우리는 한 핏줄이군요’”
한 네티즌

“새누리당을 제치고 1당도 가능한 것”
최근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꾼
영남의 보수신당

“더는 CCTV 뉴스 만들지 싫다”
KBS 파업 기자

“국가기관을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용어사전까지 만들어 내려는 듯한 기세”
‘해적기지’ 마녀사냥에 대해 한 네티즌

“좋은 공약”, “안 뽑을 수 없게 만든다”
통합진보당 문경식 비례후보의
‘이명박 구속’ 공약에 대한 반응들

노엄 촘스키, “김지윤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한국 정부와 우파의 마녀사냥에 맞서서 김지윤 씨를 방어하는 국제 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명한 반제국주의 사상가이자 활동가인 노엄 촘스키 교수를 비롯한 많은 국제 단체와 인사들이 김지윤 방어 성명을 발표했다. 명단은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8~9면



사진 출처: 350.org

노엄 촘스키 교수

항의 성명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맞서 ‘해적기지 반대’라고 외친 김지윤 씨에 대한 마녀사냥을 강력히 규탄한다.

강제로 강정 주민들을 쫓아내고 해군기지를 건설해 ‘세계 평화의 섬’에 전함을 배치하는 것은 분명한 해적 행위다. 우리는 김지윤 씨에 대한 모든 고소와 소송을 취하하고 한국 해군이 발파와 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이 만행을 중단하라는 전세계적인 합성을 건설할 것이다.

Protest Statement

We, the undersigned, strongly condemn the witch-hunt against Kim Ji-yun who said “No to an haejeok (pirate) base” in opposition to the construction of a naval base on Jeju Island, the most idyllic place on the planet. It is clearly a piracy to evict the Gangjeong villagers by force and bring the threat of warships on an “Island of World Peace” by building a naval base.

We demand that any charge and/or lawsuit against Kim Ji-yun be dismissed and the Nav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immediately stop the blasting and construction of the naval base. We intend to publicize this outrage to the working people in the world to build up a chorus of voices demanding it comes to an end.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전 MIT 교수, 미국 / 루시엔 오키프(Lucienne O’Keeffe), 미국 / 데보라 머레이(Deborah Murray), 미국 / 브루스 K. 개그논(Bruce K. Gagnon), 우주 무기와 핵발전에 반대하는 글로벌네트워크 / 두갈 맥니일(Dougal McNeill) 웰링톤 빅토리아대학교 교수, 뉴질랜드 / 엔루차(En Iucha), 단체, 스페인 / 엔 류이타(En Iulia) 카탈로니아 단체, 스페인 / ‘스페인 학생투쟁’, 단체, 스페인 / ‘카탈로니아 학생투쟁’, 단체, 스페인 / 호세 루이스 골디아(José Luis Gordillo), 바르셀로나대학교 교수, 스페인 / 알레한드로 포조(Alejandro Pozo), 델라스 평화연구센터 연구원, 스페인 / 칼메 사밋 아촌(Carme Sabat Achón), 스페인 / 데이비드 칼발라(David Karvák), 저술가, 스페인 / 앤디 덜겐(Andy Durgan), 바르셀로나대학교 교수, 스페인 / 헤수스 카스틸료(Jesus Castillo), 세발대학교 교수, 스페인 / 미구 엘 산즈(Miguel Sanz), 노조 활동가, 스페인 / 애나 로요(Anna Royo), 교사, 스페인 / 미레이아 로셀료(Mireia Rosselló), 바르셀로나 교사, 스페인 / 오스카 시몬(Oscar Simón), 바르셀로나 교사, 스페인 / 만넬 로스(Manol Ros), 바르셀로나 노조조직가, 스페인 / 알버트 가르시아(Albert Garcia), 바르셀로나 공립대학교방어캠페인 활동가, 스페인 / 애슐리 파탈(Ashley Fataar), 키프레트(Keep Left), 남아공 / 숀 이그네(Shone Igene), 키프레트(Keep Left), 남아공 / 알랜 고틀리(Alan Goalley), 키프레트(Keep Left), 남아공 / 클레어 세루티(Claire Ceruti), 키프레트(Keep Left), 남아공 / 모사 파다이(Mosa Phadai), 키프레트(Keep Left), 남아공 / 테보고 모코페(Tebogo Mokope), 키프레트(Keep Left), 남아공 / 랜스 음포푸(Lance Mpotfu), 키프레트(Keep Left), 남아공

고리 1호기의 오싹한 사고와 은폐

핵발전을 폐쇄하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

2월 9일 고리 1호기에서 외부전원이 끊기는 사고가 벌어졌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냉각 장치가 마비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같은 일이 재연될 수 있다. 이를 막으려고 핵발전소에는 여러 개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를 설치해 뒀지만 이마저 작동하지 않아 무려 12분 동안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다. 자칫하면 부산과 울산 주민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험해

질 판이었다.

그러나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후쿠시마 핵사고 1주기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이를 공식 보고하지 않았다. 반핵 여론을 피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것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은폐 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지난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정

원이 나서 은폐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2004년에는 영광 5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는데 재가동을 강행했고 일주일 동안 이 사실을 은폐했다. 2002년에는 울진 4호기 냉각수 누출 사고도 단순 누설로 축소 은폐했다. 나중에 밝혀진 것만 이 정도니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숨겨졌는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이번 사고는 굳이 지진 같은 자연재해

가 없어도 핵발전소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모든 핵발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 점에서 최근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위해 탈핵 정책을 ‘원전재검토’로 후퇴시킨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야권연대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진보 진영은 반핵·탈핵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호충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배신적 철세 행각 유감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4공장 차체과 현장위원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과연 민주통합당이 비정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민주통합당이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 20퍼센트대로 감축, 사용사유제한 조항 신설과 파견법 개정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리해고법·파견법·비정규직법 폐지, 간접고용 금지 등 핵심적인 공약은 여전히 없다.

더구나 민주통합당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저지른 반(反)노동 정책을 반성한 적이 없다.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획득하고도 개혁을 이루지 못했고 비정규직 악법과 한미FTA를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이전 정권보다 더 많은 1천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구속됐다.

이석행 씨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맡고 있던 2007년, 한미FTA 체결과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금속노조는



한 때 노동자의 대표가 '적'을 품은 철세가 돼 버렸다.

파업을 했다.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민주노총 간부들이 여러 명 구속됐다.

반면 한미FTA 체결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씨는 지금 민주통합당의 대표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노무현과 이명박의 한미FTA는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비리 혐의자, 검찰·한나라당·자유선진당 출신 철세 등을 공천하면서 욕을 먹고 있다.

“춥쌀 때 물·가스·전기·의료 민영화 반대, 소고기 수입 반대를 국민들과 함께 했던 죄로 감옥으로 끌려갔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이석행)하려면, 기회주의적으로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한미FTA 폐기 목소리를 내야 했다.

지금도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 한미FTA 폐기 투쟁에 적극 나섰던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을 대표하던 사람이 1천5백만 노동자를 배신한 것”(현대차지부 신문)라는 비판에 완전히 공감할 것이다.

게다가 이석행 씨의 민주통합당 입당은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최대 위기에 처해 있고 여전히 거리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진보가 추구할 것은 단결과 투쟁을 중심으로 두며 통합민주당과 차별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3월 17일(토) 오후 2시 서울역
공공운수노동자 투쟁 선포 결의대회
주최: 공공운수노조연맹

3월 25일(일) 오후 3시 서울도심
한미FTA 폐기! 핵안보정상회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한반도 평화 실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MB퇴진! 오바마 방한 반대!
2012 1차 민중대회
주최: 민중의힘

3월 25일(일) 오후 1시 서울도심
핵안보가 아니라 핵없는 세상
핵안보정상회의의 규탄 행동의 날
주최: 핵안보정상회의의 대항행동

3월 31일 - 4월 1일 제주
제주4.3항쟁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주최: 민주노총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금요일 저녁 7~8시(다음호는 3월 30일)

강남역 11번 출구 글라스타워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너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앞), 풀무집(성균관대앞), 이름책방(대חק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온라인

《레프트21》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4·11 총선

진정한 진보정치를 구현할 기회로 만들자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우파적 정면 돌파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은 3월 7일 제주도 구름비바위 폭파를 시작했고, 그 다음 날 KTX 민영화를 위한 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3월 15일엔 한미FTA가 발효됐다.

이명박이 3월 6일 긴급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주재한 직후에는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합참의장 등이 ‘응징’, ‘복수’ 등의 호전적 용어를 쓰며 ‘북풍’을 자극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호전적·냉전적 발언들이 “정권 차원의 공명된 인식과 계획 속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돌아보면, 집권당이 치명적 위기에 빠진 지난 몇 달 동안 박근혜의 쇠신 사기극도 이명박 정부의 친부자·반민주 정책과 부정부패에 분노한 대중을 달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민주당을 흥내내며 ‘좌클릭’을 해 봤자 어차피 불리한 게임이라는 점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이 정권은 한미FTA 발효,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KTX 민영화 등을 강행하며 오히려 보수층을 결집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를 위해 안보 위기 선전과 색깔론을 되살리고 있다.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 탈북민, 이어도 문제를 ‘북풍 3종 세트’로 이용하고 있다.

탈북민 북송 문제로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부각한 데 이어, ‘이어도는 중국의 경제수역과도 겹친다’는 중국 외교부의 발언도 부각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산토끼 잡기에 한계를 느낀 박근혜도 정부의 우경화에 발맞춰 우파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는 2005년 농민 시위를 살인 진압한 책임자이자 KTX 민영화를 추진했던 허준영 등 부패한 우파들을 ‘전략’ 공천하고, 한미FTA와 제주 문제 등으로 민주당 패러기에 여념이 없다.

5·18과 4·3 항쟁을 ‘폭동’이라고 부른 이영조도 공천했다가 취소했는데, 이는 박근혜의 역사관을 보여 준 공천이었다.

주류 지배자들은 민주통합당이 허둥대는 걸 보며 반MB 대중이 정치적 냉소에 빠지기 바랄 것이다. …

따라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새누리당 뿐 아니라 민주통합당도 아닌 진정한 진보 대안이 절실해지고 있다.

박근혜는 공천 과정에서 일부 ‘친이계’를 제외했지만, 빈 자리를 메운 친박계들은 더 부패하고, 더 우파적이며, 더 철두철미하게 1퍼센트를 대변하는 자들이 될 뿐이다.

이명박은 이런 박근혜를 “우리 나라에서 그만한 정치인이 몇 사람 없다”고 추켜세웠다. 낙천한 친박계 이태라 김무성, 친이계 이동관 등도 ‘종북좌파 저지와 우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잔류를 선언했고, 박근혜는 청와대 전 정부수석 출신인 정진석 등을 공천하며 화답했다.

‘이명박근혜’당이 본색을 강화하면서 안보 위기론의 ‘삼쌍둥이’인 ‘종북 색깔론’도 등장했다. 이명박은 “북한이 지금 가장 반대하는 것이 제주 해군기지, 한미FTA”라며 반대 여론을 매도했다. 통합진보당 김지운 후보의 ‘해적기지’ 발언 마녀사냥 소동도 이런 맥락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들은 이런 반동을 통해서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는 저축은행 로비 의혹, 이상득 차명계좌,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다시 불거진 BBK 등 각종 권력형 부패들을 감추고 입막음하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등이 바로 민주당 정부 때 추진돼 왔다는 것을 강조하며 반MB 야권을 분열시키



최근 정권의 안보 공세와 색깔론은 진보정당을 배제하고 민주통합당을 길들이려 하는 것이다. 이런 우파의 득세를 막으려면 투쟁하는 진보정치가 필요하다.

려고도 한다.

근본에서 이 프로젝트들은 한국 지배자들이 오래전부터 합심해 추진해 왔던 것들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나라당의 지지를 받으며 이 사안들이 추진됐던 것이 그 방증이다.

보수층 결집

그런데 주류 지배자들은 혹시라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자신감을 얻은 대중의 압력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이런 핵심 의제들에서 후퇴할까 봐 우려할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과 박근혜의 흥물스런 우파 동맹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명박은 퇴임 후를 대비하려고, 박근혜는 대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동맹이므로 언제든지 서로 등을 돌릴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식의 낡은 냉전 우파적 공세가 오히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반MB정권 심판 정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최근의 우파 공세는 최대한 총선 전에 우파적 정책들을 해치우고 ‘대못’을 박아 두려고 ‘돌진’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주류 지배자들은 진보정당을 배제하고 민주통합당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이런 문제들에 일관되게 반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민주통합당의 한계는 그 계급 기반과 친자본주의 성격에서 비롯한 것이다.

결국 주류 지배자들은 민주통합당이 허둥대는 걸 보며 반MB 대중이 정치적 냉소에 빠지기 바랄 것이다.

벌써 그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민주통합당 대표 한명숙은 “안보적 측면에서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한발 뺐다. 최고위원 김부겸은 ‘해적기지’ 발언을 두고 “해군에게 모욕감을 주고 … 색깔론의 빌미를 줄 뿐”이라며 한나라당 출신다운 본색을 드러냈다.

공천심사위원장인 강철규는 “[정체성

의] 내용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며 “한미FTA 찬반과 같은 것으로 정체성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털어냈다.

선대인 같은 친민주당 인사들조차 실망할 정도로 민주통합당 공천에 대한 진보 대중의 실망도 크다. 이 때문에 이해찬 탈당설이 나올 정도로 파열음도 컸다.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내도 민주통합당을 왼쪽으로 견인하겠다는 들어갔던 NGO 출신 인사들이 침묵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김기식, 이학영, 박용진 등은 당 지도부의 기회주의적 처신에 공개적 비판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난처한 우파적 의제들을 이명박이 강행하고 자신들은 그로 말미암은 선거적 반사이익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새누리당도 아니고 민주통합당도 아닌 진정한 진보 대안이 절실해지고 있다

김문성

이명박에 맞선 정치투쟁을 건설해야

박근혜·새누리당뿐 아니라 민주통합당도 “웬만하면 고쳐서 써 보려 했더니 구제불능”(선대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은 진보진영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암묵적 공모 속에 복원되고 있는 부르주아 양당 구도에서 진보정당이 압착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통합당에서 실망해 이탈한 젊은 층이 통합진보당 지지로 옮겨가는 현상도 일부 발견되고 있다.

이 속에서 우파는 최근 통합진보당을 겨냥해 ‘종북좌파’ 운운하는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경선에 출마했던 김지운 후보의 ‘제주 해적기지 반대’ 발언, 유승재 후보의 국가보안법 기소 전력, 문경식 비례 경선 후보의 ‘이명박 구속’ 공약 등을 겨냥해 “통합진보당에서 도를 넘어서는 말과 행동이 쏟아지고 있다”고 공격했다.

우파는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세력인 진보정당이 정치 위기의 틈을 이용해 득세할까 봐 경계하는 것이다. 비록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면서 인민전선(계급연합)적 성격이 가미됐지만, 여전히 통합진보당의 핵심 기반은 노동계급에 있으며 최근에도 노동자 당원들이 대거 집단 입당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시절의 핵심 정책들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대중 정당을 지향한다면서[도]… 민주노동당 시절의 급진적 정책과 노선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당의 핵심 기반인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에 충실해야 한다. 진보적 정책과 공약을 이용해 투쟁을 선동하며 이번 총선을 진보의 단결과 투쟁을 통한 진정한 진보 대안 건설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투쟁

공천과 후보 선출에서도 이런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그 점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후보 경선에 출마한 조윤숙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 윤금순 전 전국여성농민회 대표 등은 실천을 통해 검증된 후보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일부 후보는 부적절하다. 가령,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은 모든 차별과 불의에 반대해야 한다는 진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의 공천은 진보운동의 단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최근 민주통합

당과 무원칙한 야권연대를 합의한 것도 아쉽다. 이것은 통합진보당이 진정한 진보로서 입지를 넓히는 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 관련기사 4면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을 공천하고, 제주 해군기지·한미FTA 문제 등에서 오락가락 타협해 진보적 대중의 실망과 냉소를 자아내는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이 이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된다.

또, 야권연대 합의문에 담은 절충된 정책이 아니라 한미FTA 폐기, 핵발전소 폐쇄, 무상보육·무상교육·무상의료, 비정규직 정규직화, 학벌제 폐지 등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유지해 온 급진적 정책들을 선전하면서 이런 대안을 뒷받침할 투쟁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나,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말하는 위로부터 공허한 재벌 개혁이 아니라 재벌에 맞선 아래로부터 노동자 투쟁을 주장해야 한다.

투쟁을 중심에 두고 선거와 연결시키려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진보의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선거에서 진보 정당과 후보의 전진에도 유리하다.

언론사 파업이 낙하산 사장들을 퇴진시킬 때까지 연대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핵안보정상회의가 반대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지지 못하도록 조직해



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를 이용한 우파의 안보 공세가 득세하지 못하게 맞서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투쟁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명박 정부에 맞선 일반화된 정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3월 25일 열

릴 민중대회는 총선을 앞두고 이런 투쟁을 모으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류정당의 정치 위기 속에서 다가오는 총선 국면을 진정한 진보정치를 구현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최미진

방송사 공동 파업에 승리를!

MB를 겨냥해서 힘을 키우고 집중하자

박설

방송 3사 공동 파업에 이어, 드디어 지방 MBC 노동자들도 투쟁 대열에 합류했다.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도 23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언론 노동자 투쟁의 불길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 김우룡이 ‘김재철 낙하산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시인한 것은 노동자들의 주장이 완전히 옳았음을 보여 준다.

“김재철을 빨리 수거해 폐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김재철 퇴진을 넘어 정권 심판으로 나아가겠다.” MBC 노동자들은 수년간 쌓아 온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정말이지, 이명박 정부는 방송을 1퍼센트만을 위한 ‘독사의 혀’로 만들어 왔다.

MB의 아바타 사장들은 보도 아이템 선정에서부터 칼을 대 왔고, 인사평가로 등급을 매겨 노동자들을 감시·통제해 왔다. 시사프로그램들은 축소·폐지됐다. 김재철이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마사지를 받는 동안, 노동자들은 타 부서로 전출을 당하고 자리에서 밀려났다. (PD수첩) PD는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고 검찰 기소까지 당했다.

지방에선 방송사 통제함과 해고가 잇따랐다. 구조조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진주MBC 조합원 절반이 징계를 당하기도 했다.

이 모든 악의 뿌리는 이명박 정부다. 이명박은 이제 와서 파업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역겨운 책임 회피일 뿐이다. 정부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깊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방송 파업의 전진이 정권의 위기와 몰락을 가속화하며 더 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현재 투쟁의 판돈은 매우 크다.

그래서 MB의 행동 대장들은 손배가 압류를 파붓고 해고·징계 등 탄압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MBC 사장 김재철은 ‘전 사원의 프리랜서화, 예능·드라마 전면 외주화, 기자직 계약직화’ 등을 추진하겠다고며 강도 높은 대응을 시작했다.

이렇게 대결이 첨예해진 지금, 일각에서 ‘총선 방송을 포기하면 새누리당만 도울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3월 8일 방송 3사 공동 파업 집회. 이번엔 그야말로 “종결 파업”을 벌여 ‘MB씨 방송’, ‘김비서 방송’을 바꿔야 한다.

은 우르스롭다. 이런 주장은 총선 전에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을 모색하자거나, 길게 보고 총선 이후를 도모하자는 식의 얘기를 함축한 듯이 들린다.

2010년 MBC 파업의 경험은 이런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 준다.

당시에도 일부 친민주당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방송에 주력해야 한다”며 MBC노조 지도부에게 파업 종료를 권했고, 당시 노조 지도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투쟁을 자제하고 투표로 심판하자는 논리와 맞닿아 있었다.

그러나 당시 6·2 지방선거에서도,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방송 3사의

편파 보도는 계속됐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투쟁을 정리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파업이 종료되자마자 <뉴스데스크> 권순표 앵커가 교체됐고, 징계가 줄줄이 이어졌다. 정부의 언론 통제는 더 심해졌다.

MBC 노조는 이런 뼈아픈 경험을 딛고 다시금 싸움에 나섰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 상태에서 파업 접을 거면 시작도 안 했다”고 말한다. “김재철 퇴진이 우선이고, 그래야 공정 방송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노동자들의 말이 백번 옳다. 진정으로 이명박과 새누리당을 꺾을 힘은 ‘MB씨 방송’, ‘김비서 방송’이 계속되지 않도록 파업을 확대해 투쟁의 힘을 강

력히 키우는 것에 있다.

‘불공정·편파 방송’을 중단시키는 방송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속될 때, 진정으로 이명박과 새누리당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겨레>도 “청와대는 특히, 언론사 연쇄 파업이 대규모로 장기화하면 총선에서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고 썼다.

실제로 사회적 파장이 큰 투쟁이야말로 사회 분위기를 왼쪽으로 이동시켜 우파 후보에게 타격을 가한다.

2002년·2004년에 여중생 미군 장갑차 압사 항의 투쟁과 탄핵 반대 투쟁은 그런 구실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도 ▶ 5면으로 이어짐

방송 파업 노동자들의 목소리 “승리를 위해 전진해야 합니다”

“MBC가 한 마디로 삼성처럼 돼 가고 있어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려 하고, 직종별로 임금 차등을 두겠다고 합니다. 공채는 뽑지 않고 계약직을 늘리려고도 합니다.

김재철 사장은 보직 간부들에게 돈을 뿌려 자기 밑으로 줄을 세웁니다. 비판적인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남발하고 시사프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돈을 못 벌어 온다’며 모욕감을 주죠.

우리를 ‘언론인’으로만 보지 말고, ‘노동자’로 봐 주십시오. 우리의 일을 많이 알려주십시오.”

MBC 시사교양국 김중우 PD

“지방 방송사 사장들도 모두 김재철이 임명합니다. 그동안 지역 방송의 자율 경영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측이 세게 나올수록 우리도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총선 보도도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김재철 퇴진이 먼저입니다.”

포항 MBC 박찬열 PD

“취재를 나가기도 전에 기사 제목이 내려옵니다. 모든 기사는 부장단에 의해 수정됩니다. 늘어난 편파 보도, 떨어진 공정성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큼니다.”

KBS 8년차 보도국 기자

“사측은 지난 파업을 이유로 중징계를 하고, 보도부장을 비롯해 요직에 막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업 승리를 위해서는 굳건히 대오를 유지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언론노조도 서로 소통하고 동력을 극대화해, 총파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KBS 박노원 아나운서

“공정 방송을 위해 가장 앞장서 싸운 동지들이 해고자들입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해고자 복직입니다. 방송 3사 뿐 아니라 투쟁하고 있는 국민일보, 부산일보, 연합뉴스도 함께해야 합니다.”

YTN 이교준 해고자복직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정리 오정숙, 신정아, 박설

정영하 MBC 본부장 “김재철 체제에선 방송 복귀 않겠다”

MBC노조 정영하 본부장은 최근 조합원들이 모인 집회에서 기층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파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이 지켜지리라 믿는다.

“김우룡 씨가 말했습니다. 김재철은 청와대 낙하산이 맞습니다. 낙하산 사장 퇴진시켜야 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방송은 불공정한 선거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선거 보도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상태로는 총선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고했습니다. ‘빨리 치우지 않으면, 빨리 바꿔놓지 않으면, 김재철을 물러놓지 않으면, 광장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전국으로 파업이 확산될 것이다.’

“이제 명확합니다. 우리는 저들의 품에 안긴 MBC를 국민의 품으로 가져가기 위해 광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미디어랩 논란

광고 다툼에 휘말리지 말고 단결해야

방송사 파업을 지지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물음도 나온다. 연대기구 출범은 왜 늦어졌는가? 지방 MBC 파업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린 것인가? MBC노조와 언론노조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은 무엇인가?

이런 불협화음의 기저에는 미디어랩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처음에 각 노조들과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조중동 방송(종합편성채널, 이하 종편) 폐기와 종편까지 포함한 ‘1공영립 1민영립’ 방안을 제기했다. 그런데 각 노조들 사이에 부분주의가 나타나면서 단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특히 언론노조 지도부가 한나라당과 야합한 민주통합당의 손을 들어준 게 문제였다. 민주통합당은 사실상 종편의 광고 직거래를 허용하며, 나머지 공영방송사들을 공영립으로 묶는 방안을 추

진했다. 언론노조 지도부는 이것이 ‘차악’이지만 지방·종교 방송의 재정난을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MBC 노조는 이런 언론노조 지도부를 옹계 비판했지만, MBC 사측의 ‘광고 직거래’ 주장에 어느 정도 이끌렸다. 지방 MBC 노조들은 이런 중앙 MBC 노조를 비판하며 언론노조 지도부를 편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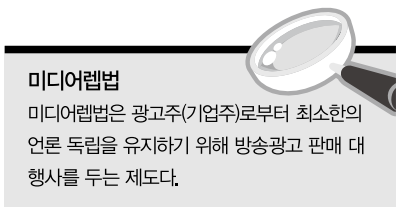
이런 갈등은 이번 파업에서 즉각적인 단결을 꾀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다행히 지금, 이 노조들은 MB 낙하

산 퇴진이라는 대의로 다시 뭉쳤다. 언론노조 지도부도 앞으로 미디어랩법 개정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투쟁을 통해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의 분열은 지배자들만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미디어랩에 관해서도 노동자들의 공통 이해를 반영할 요구가 필요하다. 사측은 누가 광고를 더 많이 차지하는가를 두고 다툴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엔 이것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일부 노동자들의 고용이나 노동조건이 광고 수익에 좌우되는 것은 지방방송에 대한 재정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외주화가 확대돼 온 탓이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바꿔야 한다. 광고 다툼에 말려들어 노동자들끼리 서로 반목하면 방송 공공성 확대, 지방방송·시사프로그램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외주화



한미FTA 발효

한미FTA 폐기 투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3월 15일 한미FTA를 발효했다.

한미FTA는 이 나라 지배자들이 오래 전부터 합심해서 추진해 온 핵심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지배자들은 세계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이용해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효를 밀어붙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 발효에 맞춰 “각종 규제 같은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철도를 대기업에 팔아 넘기는 KTX 민영화는 이미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편 서비스에 민간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민영화 정책들은 의료·우편·전기·수도·가스·철도 같은 공공서비스를 기업에 넘겨줘 99퍼센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FTA의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 허가·특허 연계 제도, 역진방지조항(래치) 등은 이런 정책을 가속화하거나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복지 확대와 공공서비스 강화 등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키려면 한미FTA를 폐기해야만 한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새누리당은 한미FTA 발효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 한다.

그러나 한미FTA·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한 세력으로서 원죄가 있는 민주통합당은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있다.

우파들의 공격을 받아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한미FTA 폐기가 아니라 “재재협상”이 민주통합당의 입장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3월 14일 열린 한미FTA 폐기 집회. 오락가락 갈팡질팡 하는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폐기를 위한 진보진영의 독립적 투쟁이 대안이다.

**진보정당과 진보진영은
민주당과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한미FTA 폐기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 4면에서 이어짐

희망버스 운동이 확대되고 복지·무상급식에 대한 대중적 열망이 확대되면서 가능했다.

총선 보도

지금 방송 3사 공동 파업은 이런 힘을 만들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저들이 초강경 대응을 하고 정부와 기성 언론들이 이 투쟁을 애써 무시·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쪽도 초강경 “종결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방송 3사 노조, 서울과 지방의 MBC 노동자들이 더 단단히 뭉쳐야 한다. 일부에겐 양보 제스처를 취하고 일부에겐 강력한 탄압을 가하며 이 간질을 시도하는 정부와 사측의 시도를 무력화해야 한다.

KBS 노조는 파업 대열을 늘려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고, YTN 노조도 시한부 파업을 넘어서야 한다. 대체 인력 투입 등 파업 효과를 없애려는 시도를 저지하는 행동도 필요하다.

진정 “지혜로운 파업”은 힘을 최대한 집중해 효과를 극대화해서 승리를 앞당기는 것이다. 힘을 다 쏟아부리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면 끝수록 상대방에게 반격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언론 통제 중단, 낙하산 사장 퇴진, 징계 철회, 해고자 복직,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방송사 노동자들이 단결을 강화할 때 힘은 배가될 것이다.

무엇보다 3사 파업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언론노조·진보정당과 사회단체 등 광범한 진보진영이 함께 정부에 맞서 힘을 합쳐야 한다.

최근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민주노총·참여연대 등 3백 50여개 단체가 방송사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기구(엠비 방송장악 심판·낙하산 퇴출·공정보도 정취를 위한 공동행동, 이하 공동행동)를 발족했다. 출범이 늦어진 것은 아쉽지만, 이제라도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것은 반갑다. 진보진영은 폭넓은 연대 투쟁을 조직하며 투쟁의 초점을 만들어야 한다.

연대기구는 강력한 연대 투쟁을 건설하는 구실을 해야지, 혹시라도 지난 2010년 MBC 파업 때처럼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온건화 압력을 넣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언론노조 지도부가 그 구실에 서야 한다. 공동행동은 〈연합뉴스〉, 〈부산일보〉, 〈국민일보〉 등 곳곳에서 싸우는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도 투쟁의 핵심인 MBC를 비롯한 방송사 파업의 실질적 지원부대가 돼야 한다.

민주노총의 구실도 중요하다. 3월 25일 민중대회는 여러 요구들을 한데 모아 역겨운 반격을 시도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 투쟁의 기세를 몰아 방송사 투쟁을 지지하는 하루 연대 파업 등을 조직해야 한다. 최근 전교조 광주지부가 발표한 ‘언론 파업 지지 조화’ 계획을 확대·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이런 투쟁을 건설할 때 하반기 ‘정치 파업’도 가능할 수 있다.

진보정당 지도부도 선거 심판에만 기대며 투쟁을 등한시해선 안 된다. 거리와 작업장의 투쟁을 확대·강화하는 것은 진보정당의 의무이며, 그럴 때 선거에서도 진보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

〈한겨레〉오태규 논설위원도 “노 전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전략으로 채택했던 ‘동시다발 FTA 전략’의 유효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민주통합당을 거들었다. 게다가 민주통합당은 김진표 같은 한미FTA 찬성파들을 공천했다.

민주통합당의 이런 태도는 한미FTA 반대 운동의 김을 빼는 구실을 해 왔다. 지난해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때도 뒤늦게 거리로 나왔던 민주당은 겨우 3주 만에 국회에 등원하며 거리의 저항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아쉽게도 통합진보당 지도부와 일부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이런 민주당을 비판하며 독립적인 운동을 건설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난 연말 거리에서 솟구친 저항의 동력을 유지·확대하지 못했다. 최근의 야권연대 협상에서도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한미FTA 폐기’ 원칙에서 물러섰다.

이런 태도는 한미FTA 폐기를 바라는 진보적 대중의 사기를 떨어뜨려 선거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진보정당과 진보진영은 민주당과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한미FTA 폐기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또, 한미FTA 효과를 보려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KTX 민영화 등 공공서비스 구조조정 등에 맞서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이런 투쟁이 성장할 때만 발효된 한미FTA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고,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등장할 새로운 의회·정부가 한미FTA 폐기를 수용하도록 강제할 힘을 만들 수 있다.

강동훈

통합진보당 지도부의 무원칙한 야권연대 합의 비판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3월 10일 타결된 야권연대 협상에 대해 “우리 사회를 진보의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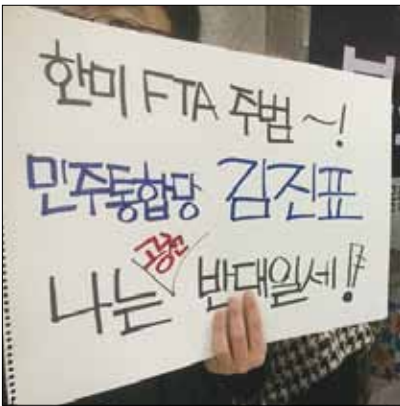
물론, 이번 총선에서 야권연대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 진보적 대중이 지지할 만한 민주당 후보가 나와서 진보정당의 후보와 힘을 합치면 새누리당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이명박과 새누리당을 꺾기 위해 ‘야권연대’, 즉 민주당과의 선거연합과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럴 때조차 대중투쟁 건설이라는 진보의 핵심 과제를 희생시키거나, 민주통합당에 대한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야권연대를 불가피한 타협이 아니라 모든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미덕처럼 생각하는 잘못이다.

게다가 야권연대가 불필요한 경우도 많다. 먼저, 새누리당과 별로 다르지 않은 민주통합당 후보와 단일화할 이유는 없다.

또, 영남처럼 어차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힘을 합쳐도 새누리당을 누르기 어려운 곳에서도 야권연대는 불필요하다. 호남처럼 어차피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새누리당이 이길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야권연대가 불필요한 곳에서는 진보정당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며 진보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그런데 이번엔 타결된 야권연대의 내용은 이처럼 진보적 원칙에 근거한 야



김진표 공천에 반대하는 ‘수원 촛불’ 활동가들

권연대로 보이지 않는다.

먼저 이번 합의는 주요한 정책들에서 진보의 기준을 후퇴시켰다. 한미FTA는 ‘폐기’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 FTA의 시행 반대”로 절충됐다. 제주 해군기지는 ‘백지화’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로 후퇴했다. ‘파견법 폐지’도 “불법파견 금지”로 후퇴했다. 핵발전도 ‘폐기’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로 후퇴했다.

게다가 후보 합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절충된 정책마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김진표, 노영민(미디어법 하향) 등 ‘새누리당 X맨’들을 위해 통합진보당 후보가 용퇴하기로 합의해 줬기 때문이다. 왜 통합진보당이 ‘총선유권자네트워크’도 심판 대상으로 선정한 일부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위해 무공천을 하거나 후보들을 용퇴시켜야 하는가?

이 때문에 선대인 씨나 ‘수원촛불’ 등은 이번 합의를 비판하고 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무공천이나 용퇴가 아니라 경선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바람을 일으키기 어려운 전화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은 조직력에서 앞선 민주통합당 후보들에게만 유리하다. 게다가 보수적이고 부패한 민주통합당 후보하고는 경선을 할 이유도 없다.

이미 서울 서초을, 강남갑, 노원을 등의 통합진보당 후보들은 무원칙한 야권 단일화와 경선을 거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예컨대 “민주통합당 [노원을] 후보인 우원식은 비정규직 악법을 통과시킨 주역”인데, 이런 후보와 경선으로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과의 이런 ‘묻지마 야권연대’ 타결에 매달리느라 통합진보당과 다른 진보정당들(녹색당, 진보신당)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 매우 심해진 것도 안타깝다. 녹색당은 친핵 경력의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양보한 통합진보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무원칙한 야권연대가 진보의 단결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근래 주요 사안마다 새누리당과 타협하고 비리 혐의자, 검찰·한나라당·자유선진당 출신 철새 등을 잔뜩 공천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민주통합당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된 합의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진정한 진보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파의 위기를 이용해 단결과 투쟁을 건설하며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불필요한 타협이 아니다.

전지윤

타리크 알리가 말하는

혁명, 봉쇄 그리고 미국 제국주의

아랍 혁명과 저항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전쟁 위험과 이라크 이후의 미국 제국주의에 관해 **타리크 알리**와 인터뷰를 했다. 타리크 알리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저술가이자 좌파 활동가다. 한국에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근본주의의 충돌》(이토), (1968)〈삼인〉, 《술탄 살라딘》(미래인)과 《석류나무 그늘 아래》(미래인) 등이 있다.

미국 제국주의가 이라크에 개입한 결과의 대차대조표는 어떤가?

정치적으로 이라크는 미국 외교 정책에 재앙이었다. 그들은 사실상 경찰국가처럼 운영되는 하수인 국가를 세웠다. 일부 의견을 들어 보면 억압의 정도가 사담 후세인 말기보다 더 높다. 이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다수 시아파와 소수 수니파를 대립시켜 종교·인종에 따른 분열이 생겨났다. 이것이 첫째다.

둘째로 이라크 개입으로 이란이 중동에서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는데 당연히 미국은 이를 원치 않았다. 미국이 이런 일을 예견하지 못한 것이 놀랄 일이다.

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 여전히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용병의 수가 수천 명에 이른다. 그리고 이라크에서 철수한 미군은 주로 중동의 다른 기지들로 이동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할 때면 매우 신속하게 카타르에 있는 대규모 기지에서 폭격을 진행할 수 있다.

전쟁으로 이라크 사회 기반시설은 파괴됐고 이라크 인 1백만 명이 죽었다.

심지어 이라크 폭두각시 정권도 고아 5백만 명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2백만 명이 집 없는 난민으로 주변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도주의 관점에서 이 전쟁은 완전한 재앙이었다.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라크 총리 말리키가 미국 군대가 없는 바그다드의 안전지대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재앙의 제대로 된 대차대조표를 받아 보려면 6개월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미국과 이란 정권의 긴장은 얼마나 심각한가?

당장 이란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물론 미국이 진정으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바그다드가 함락된 후 이스라엘 대사는 미국 대사에게 '지금 중단하지 말라. 다마스쿠스와 테헤란을 접수하라'라고 했다. 이것이 미국 지배 계급 내의 '극단주의자'들의 목표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이란 정권은 약한 정권이 아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이란에서 거대한 저항이 벌어질 것이다. 둘째, 수많은 국가들이

이란 정권 편에 서서 단결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도 침략 당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란은 제대로 된 군대와 리비아에서처럼 쉽게 굴복시킬 수 없는 공군력을 가지고 있다. 이란은 또한 미사일 폭격을 할 수도 있다.

이란인들은 이라크 민중에게 투쟁에 나서라고 말할 것이다. 이란인들은 인구 다수가 시아파인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권력을 장악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저항에 동참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미국은 이란을 포함해 네곳의 전선에서 전투를 벌여야 할 수도 있다. 펜타곤은 이것이 자신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다.

이란 봉쇄 조처도 바보 같은 짓이다. 중국은 이란과 석유와 가스를 공급받는 30년 계약을 맺고 있다. 나는 중국이 봉쇄를 보고만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러시아도 그럴 것이다. 봉쇄는 결코 이란 지배자들을 위협하지 못한다. 봉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고 봉쇄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란의 종교 지도자·지배자들을 더욱 존경하게 만들 뿐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란의 원자료를 공격하도록 고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란의 원자료를든 전구에 산재해 있다. 그리고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원자료를든 이슬람 성지인 콤과 가까이 있다. 콤을 공격한다고? 전 세계 시아파 무슬림들에게 이것은 메카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 생각으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란에 최대한 압력을 넣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과 파키스탄 관계가 파탄날 것인가?

미국이 파키스탄의 공식 군사 체크 포인트를 폭격해 군인과 민간인 수십 명이 죽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도발 행위였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음모론자들은 미국이 파키스탄 군대를 불안정하게 만든 뒤 탈핵화를 위해 개입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내 생각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군대는 친미와 반미 분파로 분열할 것이고 반미 분파가 절대 다수일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항상 파키스탄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아프가니스탄

과 파키스탄 국경 양쪽에 살고 있는 파슈툰족의 긴밀한 관계 때문이다. 전쟁이 지속될수록 파키스탄의 불안정성은 강화된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파키스탄에 있지 않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나토 군대가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철수하는 것에 달려 있다.

미국은 수년 동안 비밀리에 아프가니스탄 저항세력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거대한 군사 기지들을 유지하는 식으로 체면을 살리는 방식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군사적으로 매우 압도한 상황에 빠져 있다. 아프가니스탄 게릴라들을 분열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60퍼센트가 파슈툰족이고 수니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종교적 기반에 따라 분열시키려는 시도는 먹혀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라크에서처럼 분열 작전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인구 대다수가 폭두각시 정권을 반대한다. 심지어 폭두각시 정권마저도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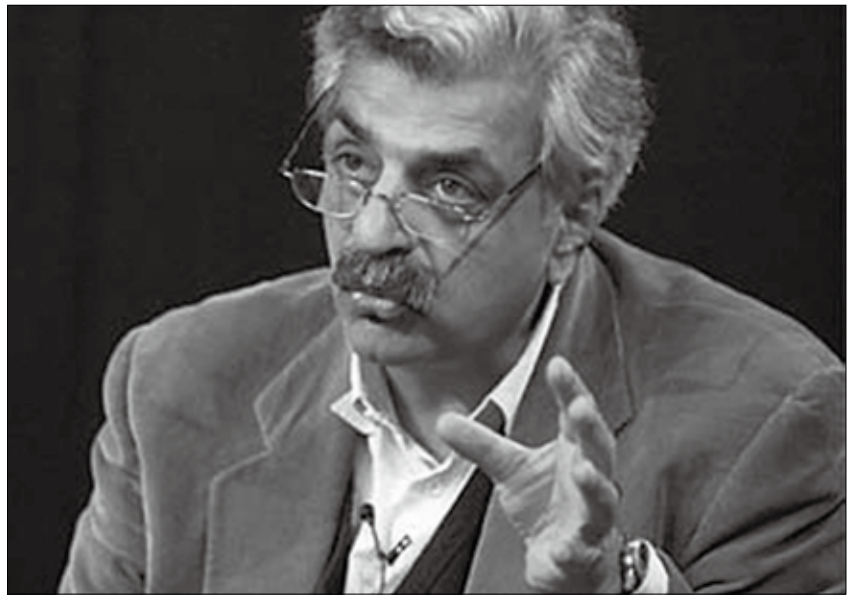
'아랍의 봄'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봉기를 보고 미국과 유럽은 완전히 깜짝 놀랐다. 프랑스 정부는 심지어 저항을 물리치려고 공수부대를 튀니스(튀니지의 수도)에 보내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무바라크가 물러나는 것을 마지못해 수용했고 대신 무바라크를 지지했던 탄타위와 옛 군대 장성들이 권력을 유지하도록 애쓰고 있다.

이집트 총선 결과는 핵심적으로 무슬림형제단의 승리였다. 미국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슬림형제단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심각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방은 이집트가 좇아야 할 '옳은 방식'의 사례로 공공연하게 터키를 말해 왔다. 터키의 '중도적 이슬람주의자들'은 이 지역에서 나토의 우호적인 동맹 중에 하나였다. 미국이 우려하는 핵심은 무슬림형제단이 반자본주의적이거나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새로운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다.

이집트 민중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카이로의 이



슬라벨 대사관을 점령했다. 이것은 무슬림형제단이 다루기 어려운 문제다. 내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대다수의 무슬림형제단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집트 협정을 유지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것이다. 미국은 군부와 무슬림형제단이 이집트를 공동으로 통치하기를 바란다.

이집트에서 벌어진 일은 독재자를 몰아내는 거대한 저항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민주주의를 위한 봉기였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 구실을 했던 것은 정치조직과 정당이었다. 그래서 나는 정치조직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헛소리다.

다른 한편, 가장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힘을 자각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랍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고 여기에 미래가 달려 있다.

시리아에 대한 개입 요구를 좌파는 어떻게 봐야 하나?

아사드 정권은 잔혹한 탄압을 통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어떠한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다. 아랍의 봄이 시작되고 이 투쟁이 시리아에 전파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처음에 무역사, 상인들, 시리아 부르주아들은 반란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사드 정권이 그들에게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자들도 아사드가 더 오래 권좌에 머무를수록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당연히 시리아 반대세력 내부에는 서로 다른 분파들이 있다. 시리아에 좌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강력한 공산당이 존재했는데 나중에 분열했다. 분열한 한 분파가 이 봉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매우

중요한 공산당 지도자로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는 리야드 알투르크 지지자들이다. 다마스쿠스와 알레포 두 도시의 저항에서 큰 구실을 하고 있는 강력한 좌파들이 있다. 그리고 물론 시리아 무슬림형제단과 시리아 망명자들이 있다.

시리아 바깥에 있는 시리아국가위원회는 서방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고 시리아를 접수하기 위해 서방의 개입을 바란다. 저항세력의 많은 사람들이 폭격은 원하지 않지만 외부 압력은 원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지역에 대한 서방의 어떠한 개입도 완전히 반대한다. 최선의 방법은 정권에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해 군대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외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다.

서방의 개입은 대다수의 아랍 국가들처럼 시리아를 서방에 의존하는 국가로 만들 것이다. 외부 개입을 바라는 국가들은 터키와 사우디 등 걸프 국가들이다. 과거에 나는 이 국가들을 '제국주의의 주요소 국가들'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다.

리비아 개입은 재앙이었다. 미국이 둘러싼 개입의 핑계는 카다피가 뱀가지에서 거대한 학살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카다피가 이런 협박을 한 연설이나 성명을 찾지 못했다. 나는 영국 외무부의 한 인사에게 이렇게 물었다. 리비아 개입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느냐? 그는 2만 명이라고 말했다. 2만 명이 학살을 막으려고 살해됐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2년 2월호 / 번역 최용찬



카이로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 '아랍의 봄'이 팔레스타인 해방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다.



사진 출처: Bakas Card

미군의 폭격으로 다친 아이를 안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 수많은 민간인을 죽게 만드는 제국주의 전쟁에서 이런 야만과 폭력은 흔히 벌어진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피의 일요일’

주디스 오어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남부 알코자이 마을과 나제에반 마을에서 민간인 16명이 살해됐다는 소식에 분노한 시위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발했다.

3월 11일 이른 아침, 한 명 이상의 미군이 침대에서 자고 있던 민간인들을 살해했다. 아홉 명은 어린이였다. 대부분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시신들은 담요에 싸여 불태워졌다. 두 마을은 5킬로미터 가량 떨어져 있다.

모든 보도들에서 목격자들은 군인 여러 명이 개입됐다고 하고, 이 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헬리콥터들이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었다고 말한다. 아프가니스탄 경비들도 이 학살을 자행했다는 미군 병장이 이날 밤 기지 밖으로 두 번 나갔다고 말한다. 미군 병장은 처음 밖으로 나간 뒤 새벽 12시 30분에 돌아왔고, 그 뒤 다시 새벽 2시에 기지를 나갔다.

마을 주민 아그하 라라는 새벽 2시쯤

총소리에 잠을 깰 때 군인을 한 명 이상 봤다고 말했다. “나는 벽에 숨어 그들을 지켜봤다.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총을 쏘아 댔다. 총알들이 벽에 박혔다. 그리고 그들은 큰소리로 웃었다. 그들은 비정상처럼 보였다. 술에 취한 것 같았다.” 그는 일단 숨었고 다시 나와 이웃들의 상황을 확인했다. “이것은 도살이다. 온몸에 총알이 박힌 시체들이 온 방 안에 널려 있었다. 이것이 지원군 미국의 모습인가? 그들은 짐승이다. 인간이 아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는데도 미국은 이 학살이 한 병사가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성들과 정치인들은 이 사건을 한 외롭고 미친 개인의 일탈로 묘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결코 특수한 일이 아니다. 2005년에도 미군들은 이라크 서부 하디타에서 민간인 24명을 학살했다.

살인자로 체포된 미군 병사는 워싱턴 주 루이스맥코드 기지 출신이다. 지난해, 이 기지 출신 미군들이 ‘스포츠로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을 죽이는 군인폭력단’ ‘살

인팀’을 결성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들은 범죄를 숨기고 있는 동안에도 시신들의 일부를 소름끼치게 기념품으로 보관했다.

지난 두 달 동안 버락 오바마가 미국 군대의 ‘특별한 성격’이라고 말한 것의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 2월 바그람 미 군기지에서 쓰레기들과 함께 코란이 불태워진 것이 발견됐다. 수천 명이 외국의 점령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1월에는 미군들이 아프가니스탄인 시신에 오줌을 누는 동영상이 발견됐다.

냉혈한

이러한 야만과 폭력은 제국주의 전쟁에서 항상 벌어지는 고유한 일이다. 냉혈한 살인자로 점령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자들은 점령 군인들이 부적절한 시점에 부적절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살해하면 이 군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한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점령은 민간인 수천 명의 죽음을 부르는 공식 작전들로 점철돼 있다.

얼마 전 도로에서 발생한 폭발로 영국군 여섯 명이 사망하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하지만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다.

이 전쟁은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수조 원(수십억 파운드)이 무기에 낭비되는 동안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만성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

서방 권력들은 자신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지금 아프가니스탄 보안세력을 돕기 위해 2014년까지만 머무를 것이라 말한다. 오바마와 캐머런이 아프가니스탄 군대 전투에서 “지도적” 구실을 하도록 하겠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다.

이것은 실패한 전쟁에서 나타나는 익숙한 전술이다. 그들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떠나고 싶어 한다. 이 학살이 그들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스라엘은 야만적 공격을 중단하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한나 예시시

이스라엘이 다시금 가자에 폭탄을 쏟아부었다. 3월 9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를 계획했다며 주하이르 알과이 씨와 그의 사위 마흐무드 하니니를 살해했다. 그들이 타고 가던 자동차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팔레스타인인 사망자가 25명에 이르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이스라엘 공군이 학교를 폭격해 15살 학생 나예프 샤반이 병원에서 사망했다. 다른 아이 다섯 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 폭격들에 맞서 저항세력은 로켓포로 응사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저항세력들 중 일부 사이에 휴전이 합의됐다. 하지만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은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고도 뒤로 물러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

대학생 웨암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발사한 로켓포의 70퍼센트를 중간에 막아 냈다.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타격을 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고아가 된 아이들과 남편 잃은 어머니들에게 그들의 가족과 팔레스타인 민중은 이스라엘이 이토록 자유롭게 행사하는 자기방어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번 공격은 팔레스타인인 1천 명 이상이 사망한 2008년의 3주간 전쟁 이후 가장 악랄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엄청난 폭탄을 투하했고 가자 지구를 침략했다.

최근 이스라엘과의 포로 교환을 통해 석방된 아부 하세에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난해 11월 석방될 때까지 이스라엘 감옥에 34년 동안 갇혀 있었다. 나와 같이 석방된 사람들 중 이미 여섯 명이 다시 구속되거나 살해됐다. 석방이 단지 임시적 조처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포로 교환을 할 때부터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내뱉은 모든 약속을 어기고 법을 무시하며 행동한다. 내가 그들의 목적이 평화라는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

그리스 구제안 합의

그리스인 대부분은 구제받지 않는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그리스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연대> 편집자

그리스 정부, 유로존 국가들, 그리고 은행들 사이의 합의를 두고 경제 위기의 전환점이라는 환호가 쏟아져 나왔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금융위기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고 말했고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그리스는 회복을 위한 확실한 기회를 오늘 갖게 됐다”고 허풍을 떨었다.

이 모든 위선들은 근거가 없다. 그리스 민중 대다수는 이 합의를 통해 얻을 것이 없다.

일부가 더 잘 살게 될 거라는 건 사실이다. 은행가들에게 이 합의문은 달콤한 사탕 목록이다. 미국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는 “새로 발행되는 채권의 액면가를 사실상 보장하는 3백억 유로 선불 현금 사

탕”이라고 이 합의를 묘사했다. 그는 “적어도 2백50억 유로는 은행들의 사적 소유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재구성에 쓰인다”고 말했다. 또한 “진실은 호황기 동안 대부분의 이득은 사유화됐는데 이제 대부분의 손실은 사회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행가들과 연금생활자들의 운명을 비교해 보자. 그리스은행이 연금기금을 감독한다. 그리스은행은 이 기금으로 53.5퍼센트 할인된 정부 채권을 사도록 하고 있다. 이 기금은 현금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연금생활자들은 바로 최근 15퍼센트 삭감된 데 더해 얼마 후 더욱 삭감된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건강을 해치는

그리스 연금체계는 2001년, 2008년, 2010년, 2011년에 네 차례 ‘개혁’됐다.

‘개혁’을 할 때마다 퇴직 연령은 늘어났

고, 건강을 해치는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여성에 대한 특별 혜택들이 사라졌다. 심지어 67세에 겨우 퇴직한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이들의 연금 수령액이 삭감됐다. 그런데도 그리스가 ‘개혁’을 연기해서 문제라는 주장이 있다.

2010년 IMF와 유럽연합은 그리스의 불황이 2011년에는 완화될 것이고 2012년부터는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새로 발표된 수치들을 보면 지난해에 불황은 더욱 악화됐다. 실업률이 20퍼센트를 넘어섰다. 청년 실업률은 50퍼센트 이상이다. 지난해에 1백만 명을 넘어선 실업자 규모가 언제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공식 추산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스는 고통을 당하겠지만 나머지 유럽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막았다는 주장은 또 어떤가?

많은 논평가들은 그리스 합의가 시장

에 진정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 채권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유럽중앙은행은 1천억 유로를 투입했다.

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1퍼센트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있다. 1천억 유로 투입으로 이들 국가의 이자율은 그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하는 7퍼센트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처는 일시적이다. 은행가들이 이탈리아, 스페인 부채에 리파이낸스(재금융)를 계속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은행들은 이 값싼 자금을 신흥 경제들의 주식시장처럼 더 많은 이윤이 남는 투기에 사용하기를 선호할 수도 있다.

이집트 주가는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

크 퇴진 직후 바닥을 친 뒤 48퍼센트가 상승했다. 왜 탐욕스런 은행들이 4~5퍼센트 수익에 만족해 그보다 수십 배 수익을 가져다 줄 ‘영원한 거품 만들기’를 포기하겠는가?

그리스 국가 부채는 1980년대 그리스 은행이 그리스 정부에 직접 대출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민간 은행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개혁의 책임자였던 장관은 세계은행 출신의 기술관료였다.

오늘날 유럽중앙은행은 직접 정부들에게 대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기술관료들은 여전히 이를 통해 유로존 국가들이 ‘건강한 공공 금융’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리스 경험은 정반대라는 것을 보여 준다.

“제주 해군기지는 ‘해적기지’임이 틀림없어요”

제주 강정마을 현지에서 1년 넘게 주민들과 생활하며 군세계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온 김종일 평통사 현장팀장‘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전 사무처장을 인터뷰했다.

김종일 현장팀장은 공간·만과 조중동으로부터 ‘외부세력의 핵심’이라고 지목되고 있다.

김종일 팀장은 강정마을에서 왜 그들이 ‘해적’이라고 불리는지 설명하고, 반전평화 운동이 미군기지로 사용돼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갈등을 높일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해군과 정부 당국은 철차선 문제가 없고 주민 합의가 끝났다고 얘기하는데요?

강정마을은 인구가 1천9백 명 정도 되는데, 2007년 4월 26일 교차 87명만 모인 마을을 임시총회에서 박수로 해군기지 유지가 결정됐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신속하게 결정해 버린 겁니다.

결국 2007년 8월 10일 마을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지 결의를 주도한 마을회장을 해임하죠.

열흘 후인 8월 20일에는 ‘해군기지 유지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했는데, 주민 7백 25명이 참가해 94퍼센트인 6백80명이 유체에 반대했어요.

공정회와 설명회 단 한 차례도 없이 해군의 보상 회유에 속은 소수 주민만으로 졸속으로 유지 결정을 해 버린 거죠. 그 결과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면서 마을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피해는 참담해요. <서귀포신문>이 2009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적대감·우울·불안·강박 등 정신적 이상 소견을 받은 사람이 전체 주민 중 75.5퍼센트가 됩니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계획했다고 응답한

주민도 34.7퍼센트나 될 정도로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심각한 상태죠.

해군은 구럼비가 보전 가치가 낮다고 하는데요?

세월간 거짓말입니다. 구럼비 바위는 용천수가 흘러나오는 너럭바위로, 민물을 품고 있어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자연의 보고예요. 계절마다 다양한 꽃이 피고 사시사철 붉은발발쑹개, 제주세뽕이 등 민물 생명체가 사는 1.2킬로미터에 이르는 바위를 본 적이 있는지 해군에게 되물고 싶어요.

‘해적기지’라는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적이 무고한 양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을 강탈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면, 제주 해군기지는 해적기지임이 틀림없어요.

지난해 여름부터 해군기지 공사장 안의 각종 콘크리트 설치물에 주민들과 평화지킴이들은 해골을 그리고 ‘대한민국 해적의 재산’이라고 썼죠. 그리고 불법·편법·폭력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해

군기지사업단 관계자들을 해적이라 지칭해 왔습니다.

해군 당국이 반성하고 성찰하기보다 적반하장으로 김지운 씨를 고소하는 행위는 양심적인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제주 해군기지가 미군기지로 이용되거나 공간기지로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9·11 이후 미군이 발표한 ‘해군력 21’을 보면 ‘해양 기지화’ 전략이 있는데, 이것은 ‘해양으로부터 공세와 방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주둔국에 제한받지 않고 배치와 철수가 용이한 해양기지를 구축한다’는 내용이지요.

고정된 해·공군기지를 두지 않고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핵잠수함을 핵심 전력으로 하는 기동전단을 세계 각지에 파견해 전 세계의 바다를 해양기지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군력 21’을 보면, 미 해군은 기함지만 보장된다면 제주도 서남방 해양에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이지스함 등을 동원해 중국을 봉쇄하고 MD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어요.

최근 미국은 동맹국의 해군력 동원을 극대화 해 미국 주도의 제해권을 유지하려는



김지운

결국 제주 해군기지의 성격과 구성,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오늘날 미국의 중요한 대외 안보전략은 ‘대중국 봉쇄 전략’입니다.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물론 말라카해협에서 중국과 제해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2011년 아시아안보연례회의에서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은 랑광해 중국 국방부장에게 “난사군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필리핀·베트남의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선박운행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미국 국익에 부합된다”며 이 문제로 군사적 개입도 불사한다고 밝힌 바 있죠.

한미동맹이 전략적 군사동맹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중국과 가까운 제주 해군기지는 미군 기동전단이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이미 해군력의 60퍼센트를 아·태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해군기지와 기함지가 절실한데, 오키나와 기지는 3천 톤이 넘는 선박은 정박할 수 없죠. 이지스함 등 대형함정 20척과 15만 톤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드는 제주 해군기지는 결국 미국 해군의 사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동아시아에서 필연적으로 중국과 군사적 갈등에 휘말리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 싸움에 싸우든 타지는 격이죠’.

오라카락하는 민주통합당에 기대할 수 없을 텐데,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민주통합당은 일정한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기회주의적 행보를 볼 때 그들에게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고 강정마을 주민들과 반전평화 운동 진영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죠.

강정마을 현지에서 지속적이고 완강한 투쟁을 하는 것은 반대 여론 조성에 힘이 될 겁니다. 또, 전국적 연대를 넘어서서 국제적 연대의 확장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겁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단합과 결속, 투쟁의 지를 고취시키며, 제주도 범도민책위와 전국대체회의의 결합력을 적극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반전평화 운동 진영은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대대적으로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결합해야 합니다.

김지운과 ‘해적기지’ 발언을 방어해야

지금 제주 해군기지 건설 찬반을 둘러싸고 이 사회의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김지운 씨의 ‘해적기지’ 발언에 대한 태도가 하나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이명박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이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우파들은 김지운 씨의 ‘해적기지’ 발언을 트집 잡으며 마녀사냥에 불을 붙였다.

“돌덩이는 각정하면서 탈북자는 외면하냐?”, “속 뜻은 김정은 만세?” 운운하며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진영을 매도하고 나선 것이다. 강용석과 해군참모총장은 김지운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조중동은 ‘통합진보당은 김지운 같은 사람이 후보로 나온 종북좌파당인데, 민주통합당이 이런 당과 연대해서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말한다.

저들은 이런 공격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여론에 불타기를 하고, 진보진영의 기세를 꺾으며, 사회적 분위기를 오른쪽으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 지금의 공격은 단지 김지운 씨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격이고, 무엇보다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공격인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김지운 씨와

‘해적기지’ 발언을 방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김지운과 ‘해적기지’ 발언을 방어하는 것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과 진보진영의 대의를 방어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1퍼센트에 맞서서 정의를, 진실을, 평화를, 99퍼센트의 목소리를 방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정현 신부, 고권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강정마을 주민대책위원장 등 강정마을에서 투쟁하는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해적이 아니고선 이렇게 할 수 없다”며 김지운 씨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섰다.

노엄 촘스키 등 국제적인 지식인들도 “김지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민중의 힘·반전평화연대(준)·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 등도 김지운 씨를 방어하는 성명을 냈다.

이상화·박주민 변호사는 앞으로 대규모의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해군 당국의 부당한 고소에 대응하기로 했다.

진실과 평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부 사람들은 ‘우파의 압박에 굴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는 ‘해적기지’ 발언이 “적절한 이야



김지운

기는 아니”라고 했다.

이런 반응은 유시민 대표의 전력을 떠올리게 한다. 사실 그는 참여정부 주요 인사로서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체결, 제주 해군기지 추진 등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심지어 그 시절에 유시민 대표가 ‘제주 해군기지는 더 크게 지어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이 아직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결국 유시민 대표는 우파의 압박에 기회주의적으로 타협하면서 자신이 진보정당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드러냈다. 이런 유시민 대표의 발언 이후 우파들은 더욱 기가 살아서 날뛰었다.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아직도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김지운 씨를 방어하지 않고 있는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지운 선보는 당 지도부에게 방어 성명을 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당 지도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타협적인 태도는 우파의 기세만 높여 주고 있다.

〈한겨레〉편집인이 칼럼에서 “김지운 씨가 해적기지 발언으로 비난을 자초했다”고 한 것도 유감스럽다.

‘표현이 과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며 우파의 압박에 타협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표현이나 용어가 아니다. 제주 해군기지의 객관적 성격과 구성을 어떻게 보고, 그것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가 문제의 본질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김지운 씨와 ‘해적기지’ 발언을 방어해야 한다.

그 중에서 최근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표현 자체에 대해 엄밀한 필요는 없다. (해적이라는 말이 나온)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은 반갑다.

우파들의 심자포화를 받으면서도 굽힘 없이 당당한 태도를 취하는 김지운 씨를 우리 모두가 한마음과 한목소리로 방어해야 한다.

군사 경쟁보다 협상이 더 낫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고위급 협상이 지속돼 온 난사군도나, 중일미 공동 자원 조사에 합의한 다오위다오/센카쿠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봐야 한다.

첫째, 이 지역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상호의존 관계를 맺고 있지만 동시에 시장 자원, 자원과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둘째, 이런 갈등은 전 세계적 제국주의 갈등, 특히 중미 경쟁과 결합되면서 악화돼 왔다. 오바마 정부가 일본·호주·한국·베트남·필리핀 등과 군사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 지배자들은 주변국과 영토 영해 문제에서 좀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주변국들도 미국의 지원을 업고 좀더 호전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결국, **이러도 문제는 제국주의 경쟁의 문제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러도 문제는 당장 난사군도 문제만큼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굳이 이러도가 아니라라도 한중 관계의 경쟁적 성격이 강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악화 요인이 분명하다.

최근 중국어판 <환구시보>는 이러도 문제에 대한 한국 내 논의를 소개하면서 한국인들이 북한면 중국인을 ‘짱개’로 부른다고 보도했다.

중국 지배자들 내 호전적 분위기를 대변하는 언론인 <환구시보>는 조중동과 마찬가지로 양국 노동자·민중을 이간질하면서 자국의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인구의 다수가 아직 극빈층인 중국에서 값비싼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것이나, 한국에서 사람들의 삶을 더럽히는 핵발전소 건설하는 것이나 모두 노동자·민중의 이익과 어긋난다.

양국의 노동자·민중은 자본주의·제국주의에 맞서 연대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중국 노동자·민중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연대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다.



미국 해군

폭력적으로 건설되는 제주 해군기지는 무엇보다 미국 제국주의의 전략에 따른 것이다.

라크에서만 1백만 명을 학살했고, 지금도 이란을 향해서 오바마는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한다. 이 야수가 이라크 전쟁 실패 등을 통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고, 경쟁 야수(중국)를 노려보며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를 더욱 걱정스럽게 한다. 따라서 ‘구럼비를, 평화를, 생명을 죽이지 마라’는 우리의 투쟁은 단지 이명박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이며 강정만의 투

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 평화를 위한 투쟁이다.

한미FTA라는 제국주의 경제 패권에 진정으로 반대하지 않는 민주통합당은 제주 해군기지는 제국주의의 군사 패권에 진정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민주통합당과 독립적인 반제국주의 관점에서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발전시켜야 한다.

김지운

이어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어도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계기는 조중동 등이 3월 3일자 중국 국가해양국 국장의 말을 일주일 ‘뒤늦게’ 발견한 것이었다.

중국 국가해양국 국장은 분쟁 지역에 관해 우려할 만한 발언을 했다. “국가해양국은 중국 관할 해역에 대해 정기적인 권익 보호 차원의 순찰과 법 집행을 하는 제도를 마련했고, 정기 순찰 대상 해역에는 북으로 알루(압록)강 입구에서부터 출발해 남으로 수엔자오(이어도),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와 난사군도까지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우파는 이 발언을 좌파를 공격하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할 기회로 활용했다.

예컨대, <조선일보>는 “몇 년 안에 강정마을을 앞바다에 중국 함모전단이 모습을 보일 것이다. … 좌파는 그때는 이어도를 중국에 매주자 할 셈인가” 하고 주장했다.

우파는 그런 입장이 “이어도는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나 영해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기존 공식 입장과 모순한다는 점을 모른 척했다. 그러나 제주기지 건설이 상정하는 국방력 강화와 미국 정부의 대중 위협에 편승하는 것은 긴장과 갈등을 더 부추길 것이다.

우파가 이어도 문제로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옳게 비판하는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대안도 제시했다.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EEZ에 이어도가 포함되는 것을 동의받는 대신에, 한중 양국, 혹은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조사·개발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사 경쟁보다 협상이 더 낫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고위급 협상이 지속돼 온 난사군도나, 중일미 공동 자원 조사에 합의한 다오위다오/센카쿠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봐야 한다.

첫째, 이 지역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상호의존 관계를 맺고 있지만 동시에 시장 자원, 자원과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둘째, 이런 갈등은 전 세계적 제국주의 갈등, 특히 중미 경쟁과 결합되면서 악화돼 왔다. 오바마 정부가 일본·호주·한국·베트남·필리핀 등과 군사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 지배자들은 주변국과 영토 영해 문제에서 좀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주변국들도 미국의 지원을 업고 좀더 호전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결국, **이러도 문제는 제국주의 경쟁의 문제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러도 문제는 당장 난사군도 문제만큼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굳이 이러도가 아니라라도 한중 관계의 경쟁적 성격이 강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악화 요인이 분명하다.

최근 중국어판 <환구시보>는 이러도 문제에 대한 한국 내 논의를 소개하면서 한국인들이 북한면 중국인을 ‘짱개’로 부른다고 보도했다.

중국 지배자들 내 호전적 분위기를 대변하는 언론인 <환구시보>는 조중동과 마찬가지로 양국 노동자·민중을 이간질하면서 자국의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인구의 다수가 아직 극빈층인 중국에서 값비싼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것이나, 한국에서 사람들의 삶을 더럽히는 핵발전소 건설하는 것이나 모두 노동자·민중의 이익과 어긋난다.

양국의 노동자·민중은 자본주의·제국주의에 맞서 연대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중국 노동자·민중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연대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다.

“KT 민영화의 재앙이 KTX 민영화의 미래입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KTX 민영화에 반대해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KTX범대위)를 구성했다. KTX범대위의 양한웅 공동집행위원장을 인터뷰했다.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한국통신 민영화 반대 투쟁에 앞장서다 해고된 후 공공부문 노조운동에 헌신해 왔다.

정부는 선로를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만 민간 회사에 맡기는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영화에는 KT처럼 지분 매각 방식도 있고, 발전처럼 분할 매각도 있습니다. KTX는 기존 노선은 코레일이 운영하고, 신설되는 수서발 노선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분할 매각이지요.

KTX 선로는 국민 세금으로 건설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 회사는 선로는 가져가지 않고 운영권만 가져가니 굉장히 손쉬운 방식의 민영화입니다.

정부는 민영화 하면서 요금을 10퍼센트 이상 인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KT 민영화 때, 정부는 민간 회사 간에 경쟁이 이뤄지면 요금도 내려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구당 이동통신비가 1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이명박 정권도 선거 때마다 이동통신료를 내리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게 이뤄졌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금을 내리라고 명령해도 민간 기업들은 ‘연구비 투자해야 한다’,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핑계 대면 그만이에요.

오히려 새 요금제를 만들며 요금을 더 올립니다.

공기업이라면 그나마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요. 민간회사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생색내기용으로 당장 요금을 내릴 수는 있지만 곧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민영화를 하더라도 적자노선 정부 지원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KT 민영화 전에 1백50명이 근무하는 서울 명동 중앙전화국이 3천 명이 근무하는 강원도 전화국 전체를 합친 것보다 흑자가 많았어요. 서울에 있는 흑자 전화국의 수입으로 강원도 산간 벽지에도 전화선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통영 앞바다에 있는 매물도에도, 목포 앞바다에 있는 가거도에도 통신선이 설치돼 있어요. 심지어 혼자 사는 노인한테도 전화선을 설치해 줬습니다. 산간 벽지 전화선 설치에 1천만 원가량이 들더라도, 받는 전화설치비는 겨우 20만 원 정도였어요. 9백80만 원이 적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도심 전화국 수입을 재투자한 덕분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했습니다.

KTX도 마찬가지예요. KTX는 철도노선 중 가장 큰 흑자를 남기는 곳입니다. KTX에서 남는 흑자를 철도의 다른 적자노선에 투입하는 것은 공공서비스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KTX를 민영화하면 수익이 민간회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버려요. 적자 노선 재투자자는 불가능해져요. 지금도 정부는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월 4일 철도노조 결의대회 더 낭비적이고 위험한 민영화는 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KTX 민영화가 재벌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민영 KTX의 지분에서 민간 기업 지분을 49퍼센트로 제한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지분이면 민영화한 KTX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코레일은 운영수입의 30퍼센트를 선로 사용료로 시설관리공단에 내고 있어요. 정부는 민간 KTX 회사의 선로 사용료를 40퍼센트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금도 내리고 선로 사용료도 올리는 것을 민간 기업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민간 기업은 이윤이 핵심이에요. 이윤이 남지 않는다면선로 사용료 못 올리겠다고 버티면 그만이지요.

정부는 공기업의 ‘비효율’을 문제 삼으며 민영화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도 없고, 통계도 없어요. KTX는 흑자 기업입니다. 흑자 기업을 두고 방만 경영이니, 비효율이니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KTX 사고의 원인은 열차 제작사의 탓이 크죠. 한국형 고속철도인 ‘KTX-산천’의 결함은 누누히 지적돼 왔습니다.

게다가 민영화는 곧 비정규직 확대를 뜻합니다. KT는 민영화 과정에서 약 5만 명을 절반 가까이 줄였어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일 것입니다.

민간 회사와의 경쟁이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민영화한 통신시장의 경우 SK와 KT, LG 등이 경쟁하면서 과도한 홍보비와 중복 투자가 발생했어요. 철도와 발전, 가스 등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KT는 지난해 순이익 1조 4천억 원 중 37퍼센트를 주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했어요. 공기업이었다면 순이익을 통신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금을 낮추는 데 재투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영화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파업으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노조도 4월 중순에 파업 찬반투표를하기로 했어요. 또 전 국민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민영화는 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코레일과 같은 공기업은 국민의 자산입니다. 전 국민과 함께 저항하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인터뷰·정리 안병철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경선 — 김지윤 후보의 선거운동이 남긴 것

99퍼센트의 목소리와 투쟁의 대의를 지켜내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경선 후보로 출마한 김지윤 씨가 아쉽게도 최종 선출되지 못했다.

김지윤 후보는 진보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흠집을 데 없는 인물이었다. 김지윤 후보는 이진희 박사 학위 수여 반대 투쟁, 출교 반대 투쟁, 촛불항쟁 등을 거치며 그야말로 “삼성과 MB 정부와 기성 권력에 맞장 뜨며 투쟁해 온” 투사였다.

그녀는 이런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검증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왔다.

‘주요 기간산업 국유화,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세상, 징병제 폐지’ 등 김지윤 후보가 이번에 내놓은 정책과 공약들도 매우 급진적이었다. 그것들은 노동운동이 단결해서 투쟁하며 요구할 행동강령으로서 손색이 없었다.

나아가 김지윤 후보는 이런 공약들을 위해 “국회 안팎에서 99퍼센트의 저항을 건설하겠다”는 관점을 분명히 했다. “투쟁하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99퍼센트의 국회의원, 저항의 국제 연대를 건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선거 운동 자체가 투쟁의 한복판에서 99퍼센트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 줬다. 이런 투쟁 속에서 “99퍼센트에게 권력을!”을 외치는 김지윤

후보의 모습은 수많은 투사들에게 영감을 줬다. 그리고 사회변혁 활동가가 선거에 개입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줬다.

김지윤 후보는 출마 소식만으로도 주요 언론들의 주목을 받을 정도인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러한 비타협적인 주장을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알렸다. 그리고 진보가 급진성을 유지하면서도 2030세대에게 개방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래서 그녀는 수많은 투사들의 지지를 얻었다. 또 저항의 국제적 연대 건설을 약속한 국제주의자답게 그리스, 영국, 아일랜드 등에서 국제적 투사들의 지지도 얻었다.

한편, 그녀는 선거 도중에 ‘제주 해적기지’ 발언을 빌미로 우파들이 벌인 마녀사냥의 표적이 됐다. 이명박 정부와 우파는 급진적 주장을 펼치며 투쟁을 선동하는 그녀를 눈엣가시로 여겼다.

용기와 당당함

그러나 김지윤 후보는 조중동과 우파가 퍼붓는 십자포화 속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았다. 그녀는 “진보 정치인은 억압받고, 탄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의 스피커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라며 당당하게 맞섰다.

이처럼 당당하고 용기있는 김지윤 후보의 모습은 우리 편의 사기와 투지, 용기를



김지윤 후보는 사회변혁 활동가가 선거에 개입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 줬다.

드높이며 투사들의 단결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투쟁의 요구와 대의를 광범하게 알리고, 진보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투사들과 진보 지지자들의 투지와 사기를 드높인 것만으로도 그녀의 선거 운동은 성과를 낳았다고 봐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김지윤 후보의 득표수에 실망할지도 모른다. 김지윤 후보가 진보적 정체성이 분명했을 뿐 아니라 대중적으로 매우 큰 주목을 받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클 것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지도부조차 방어하지 않는 우파의 대대적인 마녀사냥 속에서, 기본적인 조직력이 열세였던 그녀가

얻은 표는 결코 적지 않았다. 출마자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정책을 내건 김지윤 후보에게 모인 표의 의미는 가늠지 않다.

부르주아 양당 구도가 강화되는 속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관심이 쉽게 넓혀지지 않는 상황도 김지윤 후보에게는 악조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당내 조직력이 우세한 후보에 대한 조직 투표가 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소위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는 통합진보당의 고민 지점을 보여 준다. 통합진보당의 ‘당심’이 급진화하는 2030세대의 ‘민심’과 괴리되는 측면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 통합

진보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2030세대의 급진화와 높아지는 진보 지향성에 더 효과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지를 묻게 한다.

이것은 통합진보당이 급진화하는 2030세대에게 개방적으로 다가가며 민주통합당과 구분되는 급진적 대안과 투쟁을 제시하기보다는, ‘물지마 야권연대’를 추진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서 패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진보대통합의 실패를 낳았고, 통합진보당이 급진좌파와 2030세대의 호감을 얻는 진보진영 지도자들을 더 폭넓게 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통합진보당과 진보진영의 성장을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가리킨다.

이번 선거를 통해 더욱 투사로 단련되고 정치적 위상을 높인 김지윤 후보는 낙선 사례에서 “선거운동은 끝났지만 제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투쟁이 있습니다. ‘제주 해적기지’ 표현에 따른 마녀사냥에 맞서는 투쟁입니다”라고 말했다.

99퍼센트 민중의 삶과 투쟁에서 나온 진실을 말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되고, 99퍼센트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한 투쟁을 선동한 김지윤 후보의 활동은 이후 투쟁의 전진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로 남았다.

전지윤

우파의 위선을 폭로하며 탈북민을 방어해야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복송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탈북민들이 가족과 친지가 복송될까 봐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파들은 ‘탈북민 카드’를 이용해 우파 결속과 정국 주도권 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될수록 탈북민들의 처지가 힘들어진다는 것이 상식인데, 최근 남한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 내며 남북 사이에 긴장을 고조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이 주재한 긴급 외교안보 장관회의 이후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 대북 강경·호전적 발언들을 쏟아 냈다.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자유선진당 의원 박선영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회 대표단과 북한 대표단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 충돌 사건이 터지자 새누리당과 우파 언론들은 북한 대표단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듯이 침소봉대하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언론 보도만 봐도 이 의원들은 북한 대표에게 ‘신체적 위협’을 하다가 유엔 경비에게 제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남한의 지배자들이 탈북민 인권 운운하는 것은 순전한 위선이다. 한국에서 온갖 차별과 편견을 겪으며 남과 북 모두에 환멸을 품는 탈북민들이 적지 않다. 오죽하면 한국행을 선택한 탈북민 세 명 중 한 명꼴로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 난민을 신청하겠는가.

이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 겪은 ‘박해·위협·공포’(형사가 간첩으로 보고 항상 감시), “북한 인권침해 실태 간증 강요”, “북한 어투를 이유로 인권 침해” 등등) 때문에 미국의 이민국에 망명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

진보진영의 약점

지금 우파들은 탈북민 문제를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공격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우파들은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하는 진보진영이 탈북민 문제에 침묵하면서 안보는 ‘적’에게 내준다고 비난하며, 진보진영을 ‘종북’ 세력이라 매도한다.

심지어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경선 후보자 중 유일하게 탈북민들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김지운 씨까지 사실관계도 왜곡하며 음해하고 있다.

필자는 <레프트21> 지난 호(76호)에서 우파의 위선에 반대하면서도, 한국 진보진영이 탈북민들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탈북민 강제 송환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탈북민



영화 <크로싱>에서 대사관에 들어가려는 탈북민들을 묘사한 장면 진정한 국제주의 관점에서 탈북민들의 난민 권리 인정, 자유 왕래,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

들의 고통의 근원인 북한, 한국, 미국, 중국 정권 모두에 맞서 피착취·피억압 민중의 관점에 서는 국제주의를 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관점은 우리 진보 운동 내에서 여전히 소수다.

대표적으로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탈북민 강제 복송에 반대한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면서 중국 및 북한 당국을 비판하는 데만 이용하고 있다”(정책 논평)고만 언급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탈북민 문제가 “특정 나라의 ‘주권’을 흔들어 놓고 ‘인권’이라는 합정을 조작하여 … 내분을 야기해 결국 ‘주권’을 빼앗자는 음흉한 술책”이라

고 주장한다. 그리고 빈곤 탈출과 더 나은 삶을 위해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을 “CIA와 국정원 그리고 극우종교단체의 ‘기획 탈북’ 공작”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얼마 전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경선 후보 1백 분 토론 때 김지운 후보가 “우파의 논리를 경계하면서도 탈북민 인권을 위해 오히려 진보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주장하자, 김재연 후보는 “탈북이 이뤄지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선동과 기획탈북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범민련과 같은 논리로 답변을 했다.

그러나 한국에만 탈북민 수만 명이 있고 중국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민 수도 수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탈북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탈북민들 중에는 박선영 같은 우파들이 나서 탈북민을 위해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며 역겨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탈북민들을 모두 우파의 위선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보는 태도도 옳지 않다.**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한 한 탈북 청년은 “한국의 좌파들은 모두 북한을 지지하니 좌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얘길 들었다”며 진보진영이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인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들은 외면하거나 부정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착취와 억압에 맞서 싸울 동지들이다.

한편, 2월 26일치 <경향신문>에서 손제

민 기자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며 “중국 측이 탈북자를 2만 명 다 넘겨 준다고 하면,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비판을 했다. 손 기자는 한국이 이주민 인권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 내 하층계급을 구성하는 이주민이 되는 것을 우려했다.

정부의 위선

이것은 진보가 탈북민을 옹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처지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진보진영이 정부의 선별적 입국 정책, 옹색한 자원을 비판하며 싸울 때 우파들과 지배자들의 위선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또 우리는 남북한 정부 모두에게 전면적인 자유 왕래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남북 자유 왕래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탈북민들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을 떠나왔고 그런 처지로 내몬 북한 체제에 비판적이지만 자신들이 나고 자란 고향, 가족과 친구가 있는 북한 땅을 몹시 그리워한다.

탈북민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불법이라 ‘불법’ 중개인에 의존해 송금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진보진영 일각에는 탈북민은 정치적 난민이 아니고 ‘불법 월경자’ 추방은 당연한 주권 행사라는 중국 정부의 논리를 수용하는 입장도 있다. <자주

민보> 이정섭 기자의 ‘왜 갑자기 탈북자 소동인가?’ 기사가 대표적이다. 즉,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사실은 경제적 동기를 가진 이민자고, 이들은 소위 ‘가짜 난민’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1990년대 이래로 서방 정부들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난민을 거부하려고 고안한 논리다. 이 때문에 난민 인정률은 대폭 떨어졌고, 이제 유럽은 난민들을 향해 거의 문을 닫아 버린 지경이 됐다.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즉 가족의 생계와 더 나은 삶을 찾아 다른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게 문제일 수 없다. 자본과 자본가에게 열려 있는 국경이 왜 노동자·민중에게만 굳게 닫혀 있어야 하는가?

이런 점에서 범민련 유럽본부 재도이 첼란드동포협력회가 “이곳 유럽에도 합법, 불법으로 체류하는 ‘탈북자’들 99퍼센트가 전부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들로서, 돈에 미치고 환장한 ‘돈벌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고 비난을 퍼부은 것 역시 매우 유감스럽다.

이것은 피억압 민중의 관점이 아니라, 북한 지배 관료의 관점에서 탈북민에 대한 반동적 편견을 조장하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는 진정한 국제주의를 적용해, 탈북민들의 자유 왕래, 난민 권리 인정, 한국 정착 탈북민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적극 요구하며, 이들을 옹호해야 한다.

이정원

한 새터민 독자의 편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해 주세요”

<레프트21>은 잠정적으로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편지를 보내온 독자가 ‘새터민’으로 써 달라고 요청해, 이를 반영했다.

저는 2002년 10월 북한에서 탈출한 새터민입니다. 지금과 다르지 않게, 그때 당시 북한의 경제 상황 또한 매우 힘들었습니다. 밥을 못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굶어 죽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배를 채우려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남의 농장에 가서 배추를 뽑아 시장

에 팔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음식이 사라졌습니다.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은 따뜻한 곳을 찾아 해마다가 공장에 들어가, 흐르는 전기에 감전돼 죽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지원도 끊겨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민중이 힘들다며 항의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수령만을 향해 환호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북한을 탈출하겠다’고 결심하는 일조차도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다. 탈북이 1백 퍼센트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복송되거나 심지어 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터전을 잡은 사람들은 비정규직보다도 못한 일을 하며 극도의 노동력 착취를 당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거쳐 새로운 터전으로 왔지만, 남한 사회에서도 우리 새터민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취업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학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

터민들은 북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학교를 다시 다녀야 합니다. 그 학교에서도 우리는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대안학교’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남한의 ‘학벌사회’에서는 대안학교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차별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몇 주 전 중국 정부의 ‘탈북자 복송 문제’로 남한 사회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남한 여성 정치인이 단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북한 식량 지원에 반대해 온 박선영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정치판에서 사용되는

이용물이 아닙니다. 새터민을 진정으로 위하지도 않으면서, 표를 얻으려고 ‘탈북자 복송 문제’를 두고 단식을 한다거나 슬퍼하는 척하는 행위는 역겨울 뿐입니다.

우리는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제3세계에서도 99퍼센트입니다. 정말로 우리 99퍼센트를 위한다면, 99퍼센트를 억압하는 이들의 역겨운 짓들을 폭로하며, ‘탈북자 강제 송환’을 반대하고, 우리의 편에서 진정성을 갖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위선적인 남한 권력자들에 맞서, 우리 새터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함께 투쟁합시다!

이렇게 생각한다 –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이후

정규직 노조 직가입 운동을 건설하자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이후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금 사회 의제로 떠올랐다. 급속노조는 3월 17일에 영남권 노동자대회도 개최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기대가 생겨났다. 현대차 정규직지부가 개최한 간담회에 비정규직 노동자 5백여 명이 참가했고, 이 중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물론, 아직 2010년 1차 대법원 판결 때만큼 공장이 들썩이고 투쟁이 솟구치는 상황은 아니다. 바로 2년 전 패배의 기억이 노동자들에게 생생히 남아 있는 만큼, 이들의 몸과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다.

특히 당시 정규직지부 지도부는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규직 활동가 다수도 침묵하거나 소극적이었다. 이것은 이경훈 집행부가 맘 편하게 뒤통수를 칠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원·하청 공동 투쟁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규직지부 지도부가 민주파로 바뀌고, 이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주요하게 내세운 것은 나아진 측면이다. 정규직지부는 최근 정규직화 투쟁을 위한 대의원 간담회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은 앞으로 더 확대·강화돼야 한다. 사측이 판결의 의미를 왜곡·축소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정규직의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며 이간질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

무엇보다 정규직지부는 당장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야 한다. 최병승 동지만 조합원으로 받는 것은 모순이다. 보수적 국가기구인 대법원조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인정한 마당에, 대의원대회 등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더구나 이미 1사1노조를 정한 급속노조 규약이 현대차지부에도 적용돼야 옳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은 민주노조를 강화하고 정규직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방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비정규직 투사들도 정규직지부에 가입하길 망설여선 안 된다. 일부 활동가들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의 점거파업 이런 투쟁을 일으킨 투사들이 정규직 노조에 개입한다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은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이 비정규직의 독자성과 투쟁을 제약한다고 우려한다. 정규직지부 지도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온전히 대변하겠냐는 걱정도 나온다.

물론, 주요 대형노조들에서 노조 지도부가 투쟁을 회피하거나 통제하려는 경우는 적지 않았기에, 이런 우려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노조를 따로 두면 그 폐해가 적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이경훈 집행부는 비정규직지회의 독자성에도 불구하고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현 노조에 속해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일상적·정치적 유대를 돈독히 하고, 연대를 촉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더구나 지금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집행부 구성에도 난항을 거듭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지부의 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투사들은 정규직지부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선전·선동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건설해야 한다. 한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있는 노조에 개입해 더 많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더 강력한 투쟁과 단결을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것은 좌파다운 태도가 아니다.

정규직 활동가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줘야 한다. 노동자 연대는 만고의 진리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 급속노동자 결의대회

3월 17일(토) 오후 3시
울산시 명촌 근린공원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스비에른 발 지음, 남인북 옮김, 부글북스, 379쪽, 17,000원

서평



복지국가의 동력은 '계급타협'이 아니었다

이 책의 원제는 '복지국가의 흥망성쇠'다. 저자는 북유럽 복지모델의 대표적인 노르웨이에서 30년간 노동운동을 해 왔고, 그 경험으로 복지국가의 성립과 쇠퇴를 분석적으로 다뤘다.

첫째, 복지국가는 노동운동과 강력한 노동조합의 산물이었다. 또한 '20세기 전반기 동안(러시아혁명 포함) 자본과 노동의 세력균형을 바꿔 놓은 투쟁과 대결의 결과'였다.

따라서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평화적 협상과 협력으로 복지국가를 이룬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것은 운동의 조직적 힘과 당시의 사회적 대결이라는 원인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복지국가가 안착하면서 마치 '사회협력 이데올로기'가 복지국가의 동력인 것으로 포장됐으나, 저자는 실제 복지국가는 노동의 '권력관계'가 자본보다 우위에 있을 때만 유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한다.

무엇보다 사회협력 이데올로기는 도리어 사실상 복지 축소의 원인이 됐다. 또한 역사적으로 자본가들도 복지가 사회주의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 때 타협으로 복지국가를 받아들였다.

결국 '계급 타협'조차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힘에 바탕을 뒀다는 점을 저자는 강조한다.

둘째,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공세에 복지국가들도 공격받고 쇠퇴했다. 저자는 지난 30년간 가장 수준 높은 복지를 유지한 노르웨이조차 '타이타닉의

감판'일 뿐이었다고 주장한다.

북유럽 복지국가도 민영화, 노조 조직을 저하, 금융자본의 확대, 독점과 부패 등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정치적으로 '사회협력 이데올로기'에 감염된 복지국가의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정당들은 지난 30년간 공격에 취약했고, 일부는 속수무책이었다.

1990년대 프랑스의 강력한 노동운동 같은 대중투쟁만이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격을 좌절시킬 수 있었다. 저자가 살고 있는 노르웨이에서조차 빈부격차 확대, 연금 축소, 공공주택 축소, 에너지시장 민영화 등이 지난 10년간 진행돼 왔다.

권력관계

그중에서도 '워크페어' 정책은 하나의 상징적 이데올로기 공세였다. 저자는 '워크페어' 정책의 실질적 실패를 차치하고 서라도, '일을 하면 지원한다'는 수사는 일을 하지 못하면 처벌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퍼뜨렸고, 노동자들 사이에 '불신'과 '의심'을 심어 놓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때문에 저자는 '워크페어' 정책을 사회민주주의정당과 심지어 노동조합까지 받아들였다는 점에 개탄하며, 명확한 반대를 주문한다.

셋째, 저자는 이런 공격에 충분한 대응을 못한 출발점을 '계급 타협'의 시대에 시작된 노동운동의 탈이데올로기화와 탈정치화에서 찾는다. '워크페어'나 '노동의 잔혹화' 같은 자본의 공격에 대한 대

응을 체제가 아니라 개인에게서 찾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시장자유주의자의 사상을 흡수한 것이 약점이었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빈곤과 실업 등을 만들어 낸 원인보다 현상에 집중한 정치를 '상징정치'라고 지칭하면서, 좌파정당들도 '법적 형식주의'에서 '권력 현실주의'로 관심의 초점을 옮겨야 하며, '상징정치'를 폐기해야 한다고 옹계 지적한다.

저자는 실제 통계와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현 시기 복지국가의 문제점을 설명한다.

물론 저자가 자본과 노동의 '계급 세력 균형'이라는 용어보다는 다소 추상적인 사회학 용어인 '권력관계'를 사용해 이러한 변화를 설명한 점은 아쉽다.

번역자가 노동자를 '근로자'로 번역한 점 또한 안타깝다.

그러나 이 책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알려줘, 현재 복지 논쟁에서 큰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저자가 옳게 주장했듯이 복지국가 건설에 중요한 것은 '세금과 재분배가 아니라 권력관계'다. 그리고 그 '권력관계'는 시장자본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옹호한 투쟁을 강화할 때 확보된다.

정형준

계간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21

12호 2011년 겨울

www.marx21.or.kr

가격: 16,000원

쟁점 **오늘의 위기와 저항**

우리 시대의 경제 위기
미국 '점거하라' 운동의 의의
오늘날 중국의 저항 운동
계속되는 이집트 혁명
카다피 몰락과 리비아의 앞날

특집 **알렉스 캘리니코스 2011년 방한 강연 (2)**

금융화와 오늘의 세계경제
사회민주주의 —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인민전선이 진보운동의 패배를 부르는 이유
대답: 오늘의 세계와 혁명적 좌파

기획 연재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1. 마르크스의 경제위기론과 그에 대한 비판

서평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한국 노동계급은 쇠퇴했는가?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 2년 120,000원 | 3년 180,000원 | 5년 300,000원 | 7년 420,000원 | 10년 600,000원
《마르크스21》의 지속적 발간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www.marx21.or.kr)에서 휴대문 결제,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토론광장

3월 26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의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립니다.

Letter@left21.com



3월 10일 강정마을에서 열린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해적질’이 판치는 강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기어코 구럼비를 발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토요일 ‘다함께’ 회원들과 함께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강정마을에 걸 현수막을 출력하느라 제주도 현지 인쇄소를 찾았다. 아저씨 왈 “김지운 씨가 오는 줄 알고 사인 받으려 했다.” ‘해적 기지 반대’ 문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신 모양이었다. 역시 민심은 김지운 씨 편에, 그리고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여론의 편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강정마을에 도착하자 우리를 반긴 건 여기저기 나부끼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 현수막들이었다. 특히 노동조합들에서 내건 현수막이 많았다. 4.3 제주항쟁을 맞아 이곳 강정마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한다는데 기대된다.

마을회관 앞에서는 평화문화제 집회가 한창이었는데 구럼비 발파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고 한다.
짧게 집회를 마치고 구럼비 쪽을 향해 해상 시위에 나섰다. 현행법상 폭파 현장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전국에서 모인 활동가들, 정부와 우파의 마녀사냥에 맞서고 있는 김지운 씨 등 많은 이들이 바다에 몸을 던졌다.
정부와 경찰은 카약을 빼앗기 위해 문정현 신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특히 수영을 유달리 잘하는 송강호 박사에게는 해경 서너 명이 에워싸 물 속에 처박고 수시로 물을 먹였다.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일들이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걸 해적이라 하지 않으면 달리 무어라 표현할까!

강정마을 특집 <뉴스타파>를 함께 시청할 때는 여기저기서 욕설과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두 번에 걸쳐 자체 조사한 해군 당국의 보고서에서조차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로서 매우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나왔다는 사실은 기지 건설 반대운동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줬다.
촛불문화제 때 김지운 씨가 정부와 우파의 공격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자 많은 이들이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다. 김종일 평통사 활동가는 강정마을 곳곳에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말들과 함께 ‘나도 고소해’라는 글들을 붙이자고 말했다.
짧은 기간 강정마을에 머물렀지만, 정부의 해적질과 이에 맞선 강정주민들의 끈질긴 저항, 무엇보다도 낙천적인 강정주민들의 모습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정숙

진보 국회의원 후보의 언어는 투쟁하는 민중의 언어여야

김지운 씨의 ‘해적기지’ 발언과 관련해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민중이 할 말과, ‘공당’이나 ‘공인’으로서 할 말이 따로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모종의 엘리트주의다. 그리고 진보 정치 리더들에게 의회 안에서 주류적 논리에 ‘순치’된다는 말과 다름없다.
진보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연대는 투쟁하는 민중에 공감하며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자신의 입을 빌려 연단에서 터뜨려 주는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크게 고무받는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중앙정부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그분들의 눈에 해군은 결국 육지에서 건너온 ‘해적’밖에 더 되겠는가. 투쟁하는 민중의 ‘정제되지 않은’ 언어 속에 힘이 있고 진실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울분을 김지운 씨가 공감하며 같은



‘해적 기지’ 발언은 제주 주민의 심정을 잘 대변한 것이다.

용어를 쓴 것이다. 만약 김지운 씨가 국회 연단에서 그 말을 했다면, 강정마을 주민들은 얼마나 더 통쾌해 했을까.
여기서 김지운이 굴복하고 주류 질서에

타협한다면, 강정마을 주민들의 대의도 함께 망가진다. 조중동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다. 진보 국회의원이라면 굽힘 없이 나가야 한다.
1972년 북아일랜드에서 ‘피의 일요일’ 사건이 터졌다. 영국 군경이 평화 시위대에 발포한 끔찍한 만행이었다. 이 일에 항의하기 위해 북아일랜드 출신의 젊은 국회의원 버너데트 데블린이 의사당에서 내무장관에게 주먹을 날렸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 할지 모르나, 당시 북아일랜드 주민들에게 그녀는 영웅이었고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매신저였다. 그때까지 외면받던 북아일랜드는 그녀를 통해 다시 TV에 등장했다.
김지운은 이번엔 그런 구실을 한 것이다.

김영익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토론회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다함께 서울 서부 공개 토론회

탈북민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연사: 김영익 (다함께 활동가)

일시: 3월 22일 (목) 오후 7시30분

장소: Cnn the biz (종대입구역 9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324-3400

다함께 서울 동부 공개 토론회

탈북민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연사: 이정원 (이주공동행동 기획위원)

일시: 3월 22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여성능력개발원 3층 2강의실 (건대입구역)

참가비: 3천 원(학생 2천 원)

문의: 010-9453-6318, 010-8269-5899

다함께 서울 중북부 공개 토론회

동아시아 지역의 심화하는 불안정과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 변화

연사: 김하영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저자, 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4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해학역 4번 출구 CGV 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문의: 02-6338-2395

다함께 서울 남부 공개 토론회

미국의 아·태 전략과 높아 가는 동아시아 긴장 - 제주 해군기지는 화약고가 될 것인가?

연사: 김어진 (반전평화연대(준) 공동 간사)

일시: 3월 29일 (목) 오후 8시

장소: 모임공간 '모토' S실 (강남역 12번 출구 30미터 강남제일빌딩 8층)

참가비: 4천 원

문의: 010-2401-1987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99-13 3층 303호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west.atg@gmail.com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2-6338-2395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ibforum 서울 중구 인현동 2가 189-2 201호
---------------------	--	--	---	--

쌍용차 투쟁

서울시청 광장을 ‘희망광장’으로

장기투쟁 작업장과 쌍용차 투쟁을 지지하는 ‘희망발걸음’과 ‘희망텐트’가 ‘희망광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쌍용차, 재능교육 등 10여 곳의 장기투쟁 작업장 노동자들은 3월 1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정리하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꽃들에게 희망을’ 콘서트를 열고 농성에 들어갔다. 3월 24일에는 금속노조 상경 투쟁과 ‘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어요! 청와대 포위’의 날’ 집회가 열린다.

10일 콘서트에서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정리하고 없는 세상을 위해 서울광장에 희망의 꽃들이 모였다”며, “꽃이 피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희망버스와 촛불집회 등으로 시민사회·노동자의 분노가 모이고 있으며, 이 분노를 희망의 그릇에 담아내자”고 호소했다.

한편, 10일 서울로 상경하던 차량을 검문해 농성용 텐트를 압수했던 경찰은 콘서트 다음날 천인공노할 발표를 내놓았다.

최근 3년간 최고로 경찰 수사 역량을 발휘한 사건 5위에 쌍용차 점거 농성 살인 진압을 선정한 것이다. 이들은 무차별 폭력 만행을 두고 “기능 간 유기적 협조, 체계적인 수사계획 수립 등을 통해



3월 10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정리하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꽃들에게 희망을’ 콘서트에서 웃고 있는 김정우 쌍용차지부장. 쌍용차, 재능교육 등 힘겹게 싸우는 장기투쟁 작업장 노동자들과 희망의 연대를 건설하자.

대규모 연행자를 사법처리한 공안사건의 수사 모범사례”라고 치켜세웠다. 이것은 “스물한 번째에서 죽음의 행렬을 끝내자”는 노동자들의 호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답이었다.

희망의 씨앗

잔인하기 그지없는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총선을 앞둔 주류 정당 정치인들도 쌍용차 문제 해결에 무관심하거나

뜨뜻미지근하긴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창근 희망버스기획단 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내놓는 공약”에 기대기보다 “재벌의 탐욕에 같이 싸우고자 호소하는 대중적인 판”이 ‘희망광장’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해고자 등 ‘희망광장’ 노동자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과 핵안보정상회의 반대 행동에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들의 투쟁이 승리하려면 더 많은 희망의 씨앗이 서울시청 광장에 뿌려져야 하고 광범한 연대가 필요하다.

3월 25일 금속노조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다. 금속·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진보진영이 함께 모이는 25일 민중대회는 중요하다. 금속노조는 쌍용차 정리하고 철화와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위해 진지하게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김민우

이영일

등록금 투쟁

3·30 반값 등록금 집회로 가자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었던 반값 등록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국 4년제 대학 당국들은 올해 등록금을 겨우 평균 4.5퍼센트 내리는 수준에 그쳤다. “대학생 10명 중 9명이 등록금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역사상 등록금이 처음 인하”(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박범훈) 댔다며 온갖 생색내기를 하면서, 반값 등록금은 “세금을 더 거둬야 하고, 그러면 국가가 빚을 내야 한다”(박재완 기획재

정부 장관)며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얼마 전에는 반값 등록금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7기 한대련 의장 박자는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은 결코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6조 원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는 연간 17조 원이다. 4대강 사업에는 22조 원이 쓰였다.

게다가 사립대 재단들은 뽕튀기 예산으로 10조 원이나 되는 적립금을 쌓아

두고 있고, 이 돈으로 주식투기나 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다.

3월 30일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와 한대련이 주최하는 ‘반값등록금 완전장복 범국민대회(가)’가 열린다. 이 날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교육재정 확충과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대학생들은 이 집회에 함께하자.



2월 25일 MB 4년 등록금 정책 촉구 집회. 2월 25일 MB 4년 등록금 정책 촉구 집회. 2월 25일 MB 4년 등록금 정책 촉구 집회.

성지현

화물연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파업을 준비하다

화물연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화물 노동자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쉬러 휴게소에 들어가면 장소도 좁은데 왜 들어왔냐며 쫓겨나기 일쑤였고, 휴게소에서 물건 하나 살라치면 뺨박박이 된 화물 노동자들은 거지 취급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생산품을 실으려고 공장에 들어가면 나이 어린 직원의 하대와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물건을 싣고 졸린 눈 비벼가며 밤새 전국으로 이동하고, 추운 겨울 기름값이 아까워 시동 한 번 걸지 못하고 한 평 남짓 좁디 좁은 차 안에서 3~4시간 쪽잠을 청합니다. 그렇게 일하면서도 쫓겨날까 봐 말 한마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일한 만큼의 대가는 없었습니다.

현재 화물운송 노동자 90퍼센트 이상이 위·수탁이나 지입제 등 특수고용 형태로 일합니다.

차 한 대 없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협력하청사로, 그리고 협력하청사는 다시



2011년 9월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

운송사나 알선·주선사에 하청을 줍니다. 각각 수수료를 얼마나 챙기는지 화물 노동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돼 일하는 노동자인데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라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일하다 다치

거나 죽어도 보상은커녕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런 다단계의 폐해 속에 운송료는 끝없이 떨어지고, 옆친 데 뺨친다고 경유가와 도로비 등은 오르고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가 자꾸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본 친화적인 법·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법·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압도적 찬성

이것이 바로 2012년 화물연대가 파업투쟁을 결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화물연대는 한결같이 표준임제(화물 노동자의 최저임금제) 법제화, 기름값·도로비 인하, 노동기본권 보장 등 법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똑같은 요구, 똑같은 약속, 반복되는 불이행의 사슬을 이제는 끊어 버리자는 것이 화물연대 조합원과 지도부의 결심

입니다. 그래서 2012년 투쟁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입니다.

파업 찬반투표에서도 80퍼센트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3월 17일 공공운수 노동자 투쟁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4~5월 권역별 집회, 6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거쳐, 정부의 법 개정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조합원들도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싸우자는 요구가 많습니다.

2008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한시적이지만 영세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지급, 도로비 인하 등을 쟁취했고,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 바 있습니다.

35만 화물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는 투쟁,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을 대변하는 투쟁,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주는 투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장

핵안보정상회의

핵은 지키고 사람은 때려 잡고

강남구청이 핵안보정상회의를 빌미로 노점상을 탄압하고 있다. 3월 9일 지역 노점상들에게 단속 계고장을 발부한 것이다.

강남구청은 이를 후인 11일 밤부터 새벽 사이에 노점상들이 있던 자리에 수백 킬로그램의 돌 화분들을 설치했다. 노점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분노해 분신을 시도한 한 노점상은 현재 강남경찰서에 연행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노점노동연대와 전국노점상총연합회는 12일 ‘핵안보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노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구청의 무자비한 노점 철거를 규탄했다.

노점노동연대 출신의 통합진보당 박두선 강남갑 예비후보는 정부와 구청을 규탄하며 강남구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구청 측은 도둑고양이들처럼 새벽에 수백 킬로그램의 돌 화분들을 놓았다. 이것은 노점상의 생존권을 빼앗는 행위이니 만큼, 목숨을 내놓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계엄령 수준

농성장 밖에서 만난 중년의 노점상인은 “G20 때도 나오지 말라고 해서 한 달 가까이 장사를 못해 생계가 어려웠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라는 거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G20정상회의 때도 노점상을 철거하고, 특별법까지 만들며 진보 신문 <레프트21>의 거리 판매를 금지했다.

이번에도 강남 일대 거리와 지하철 역사 안에는 계엄령 수준으로 경찰이 늘어났다. 경찰은 15일 노점상 단체들이 선릉역 앞에서 강남구청까지 행진하려던 것도 불허했다.

노점상 단체들은 22일 낮 2시에 코엑스 맞은 편에서 면담조차 거부하는 강남구청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핵안보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생계 위협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적극 지지를 보내야 한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핵 재앙을 유지하려는 핵안보정상회의에도 반대해야 한다.

신정아

소책자 광고



왜 핵안보정상회의를 반대해야 하는가?

장호중 외 지음 | 다함께 |

63쪽 | 3,000원

구입문의 : 02-2271-2395

학교 비정규직

곽노현 교육감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나서야

연초부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따른 해고를 겪은 데 이어, 누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결할 주체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학교장이지 교육감이 아니다”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는 것이고 예산도 독립된 학교회계가 별도로 운영되는 등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서울시내 학교들을 관할하는 총괄 주체인 교육청이 형식적인 핑계를 대며 수천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니 말이다. 더구나 곽노현 교육감은 진보적 개혁 열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열망에 힘입어 당선하지

않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곽 교육감에게 비판을 쏟아 내는 것은 정말 이해할 만한 일이다.

최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은 석천초등학교 비정규직 해고 문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김상곤 교육감에게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해고된 노동자들 3시간 파타타임식으로 고용하고 이후 자리가 생기면 우선 고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라고 볼 수는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고작 일선 학교들에 ‘조리실 시설을 보수·확충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그나마도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뒤의 일이었다.

진보교육감은 자신을 지지한 평범한 노동자들의 개혁 열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진보교육감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요구를 성취할 투쟁의 힘을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전교조가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서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부 교사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무관심한 것을 두고 이해할 만한 서운함을 토로하며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사들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 전교조 서울지부 특수교육위원회와 조합원이 주도적으로 연대해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보조원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를 막아낸 것은 모범적인 사례다. 전교조가 이런 일에 더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

박태현 전교조 대의원

성균관대 강사 투쟁

학보 발행까지 막은 악랄한 학교 당국

성균관대 당국이 학내 강사 투쟁이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려고 학보 발행을 막았다.

학교 당국은 교직원들을 동원해 2월 졸업식장 앞에서 부당한 강의 박탈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하던 류승완 박사에게 폭행을 가했다. 그런데 <성대신문> 기자들이 개강호에서 이 사건을 다루려 하자, 주간교수가 발행을 막은 것이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이 발 빠르게 연대해 언론에 류 박사 폭행 사건이 보도되고, 학생들의 지지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듯하다.

류 박사 폭행 사건이 벌어진 날 학생들은 곧바로 항의집회를 열었고, 며칠 후에는 규탄 기자회견과 총장실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성대신문> 기자단이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발행을 막은 것에 책

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겠다는 주간교수를 학교 당국이 막았다고 한다. 주간교수의 겸임 배후에 학교 당국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 지난해에도 “반값 등록금 기사, 비정규교수노조 분회장 인터뷰 [등을] ... 다른 기사나 광고로 대체하고 ... 납득할 수 없는 주관적 논리를 이유로 수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성대신문> 기자단은 지금 주간교수 교체를 요구하며 신문 제작을 중단하고 있다.

학생들은 <성대신문> 기자단을 지지하는 연서명을 받고 있다. 중앙윤 영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동아리와 정치단체들이 동참했다. 류 박사의 투쟁을 지지하는 토크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다.

임준형 대학생다함께 활동가(성균관대)

전교조

교과부는 진보 교사 면직을 철회하라

3월 9일 저녁, 교육과학기술부 후문에서는 최근 특별채용으로 복직된 교사를 하루 만에 면직한 교과부 장관 이주호를 비판하는 ‘범시민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가 열렸다. 교사·학부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백여 명이 참가했다.

평일 저녁임에도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그동안 이주호·이명박의 경쟁 교육에 대해 쌓인 불만이 이번 사태로 인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대회의 발단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특별 채용으로 교사 세 명을 복직시키자 교과부가 하루 만에 이를 직권으로 취소시킨 데 있었다. 해당 교사들은 MB 경쟁교육을 반대하며 자사고에서



조현민 기자

3월 4일 ‘범시민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연희(왼쪽), 박정훈(가운데), 이형빈(오른쪽) 교사 이들을 복직시켜라!

양심적으로 사직했거나(이형빈 교사), 국가보안법으로 해직돼 10년 넘게 고통 받았거나(박정훈 교사), 사학비리를 제보해

15억 원이 넘는 돈을 국고로 환수시켰다가 보복 해직(조연희 교사)됐다. 진보 교육감을 흠집내려고, 정당하게 복직된 교

사들을 하루 만에 면직한 이번 사건은 수 많은 진보 교육 세력의 공분을 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분노하면서도 자신감에 차 있었다.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은 학교 폭력, 청소년 자살 증가, 사학 비리 문제, 대학 민주화 후퇴,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개정 문제 등 이주호가 낳은 경쟁 교육의 폐해를 꼽으며 이주호 퇴진을 주장했다.

해직 교사 세 명도 발언했다. 조연희 선생님은 학교로 돌아갈 마음에 부풀었다가 하루 만에 다시 해직된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고, “거리에 남게 되면 이주호와 MB를 갈아치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훈 선생님은 “유배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약을 받은 기분”이라며, 3인을 복

직 취소한 것은 “불법 면직”임을 주장했다. 또 이러한 이주호의 불법 행위는 진보 교육감을 흔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아래로부터 투쟁을 호소했다.

이형빈 선생님은 이번 해직은 오히려 “국가보안법, 사학재단 비리, 자사고 문제를 이슈화”시켰다며, 이번 계기로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집회를 연 단체들은 앞으로 대응 기구를 만들어 이주호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고 복직을 위한 행정 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교과부는 부당한 진보 교사 복직 취소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조현민 전교조 조합원

고려대 전학대회의 잘못된 결정 비판

노동자·학생 연대는 계속돼야 한다

3월 11일 고려대 임시전학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청소 노동자들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고려대 분회(이하 강사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는 요구를 교육 투쟁 요구안에서 빼는 안이 8표 차이로 통과됐다.

그동안 고려대 학생들은 다른 학내 구성원들과 꾸준히 연대해 왔다. 지난해 청소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일 때에도 학생들은 “임금은 올리고 등록금은 내려라” 하는 구호를 외치며 청소 노동자들과 연대했다. 학생 1만 7천 명이 청소 노동자 투쟁 지지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다. 2009년 2학기에 비정규 강사 80여 명이 해고됐을 때도 학생 1백여 명이 학내 집회를 열어 비정규 강사들과 함께 학교 당국을 규탄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임시전학대회의 결정은 매우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이런 잘못된 결정을 주도한 대의원들은 “이분들의 요구가 교육 투쟁의 요구와 상충하므로”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임금을 인상하면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학교 측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 대의원들은 말로는 ‘청소 노동자들과 비정규 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한 안은 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며, 학교 당국이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명분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실제로 문과대 학생회장이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을 방문했을 때, 전학대회에서 내린 결정을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노동자도 있었다고 한다.

청소 노동자들과 비정규 강사들의 요구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 당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단결해야만 학생들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지난해에 6년 만에 2천 명이 모이는 비상학생총회가 성사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이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줬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생들의 이번 결정으로 <한겨

레> 등은 학생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학생들 자신이 벌이는 투쟁의 명분도 깎아내렸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물론 이 잘못된 결정은 전학대회에서 순탄하게 통과된 것이 아니다. 많은 대의원들이 청소 노동자들과 강사노조의 투쟁을 지지했고, 그 때문에 안건은 격론 속에서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번 전학대회 결과를 듣고 분노한 학

생들의 대자보가 줄줄이 붙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하고 연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학대회의 결정은 이런 학생들의 정서를 전혀 대변하지 않았다. 청소 노동자들과 강사노조 투쟁에 연대해 온 학생들은 앞으로도 더 큰 지지와 연대 건설에 힘을 쏟을 것이다.

이원웅 대학생다함께 활동가(고려대)

노동자 임금을 올리면 등록금을 내릴 수 없는가?

대학 당국들은 ‘임금이 오르면 학교 재정이 줄기 때문에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며 노동자와 학생들을 이간질한다.

그러나 임금 인상과 등록금 인하 요구가 상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학교 당국의 탐욕만 줄이면 얼마든지 두 요구를 모두 이룰 수 있다.

사립대학들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의 10분의 1만 학생과 노동자들을 위해 써도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고,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오히려 등록금 인하를 바라는 대다수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는 연결돼 있다.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수록 교육 환경과 수업의 질은 더 나아질 수 있다. 비정규 교수들에게 주당 3시간 강의하면 달에 겨우 40만 원을 주면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비현실적이지 않는가.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는 바로 대

다수 노동자들을 위한 요구이기도 하다. 비싼 등록금은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교육비를 부담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등록금은 가파르게 인상돼 왔지만, 대학 당국은 청소 노동자와 비정규 교수들의 열악한 처지는 외면했고, 막대한 적립금을 쌓으며 배를 불려 왔다.

이런 학교 당국에 맞서 학생과 노동자, 비정규 교수 등이 단결해 싸워야 한다. 그랬을 때 학교에게 더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지난해 고려대에서는 청소 노동자들의 분관 점거 투쟁에 학생들이 적극 연대해 임금 인상을 이뤘다. 이에 고무받아 학생들도 점거 투쟁을 벌이며 학교에 맞서 더 자신감 있게 싸울 수 있었다.

이렇게 등록금은 인하하고 임금은 올리려는 노동자와 학생들의 투쟁이 만나는 것이야말로 대학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정선영



핵 없는 세상을 위해서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합니다”

3월 7일 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 주최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핵안보가 아니라 핵없는 세상 — 핵안보정상회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글은 **우석균 핵없는세상을위한사회 공동운영위원장**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다

“핵 테러를 반대한다는 데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자는 데 그걸 반대할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핵안보정상회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노리는 정치적 효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핵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 핵물질·원전 시설 등의 방어’를 위해 열린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핵 테러는 무엇일까요? 핵 테러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영화 <미션임파서블>에 나오는 것처럼, 핵무기로 공격하는 테러리스트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정의하는 핵 테러는 단순히 테러 집단만이 아니라 테러 집단을 지원하는 국가를 포함합니다. 여기에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말하는 핵 테러의 핵심이 있습니다.

핵 테러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바로 9·11 이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면서 미국은 바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끝나고 그나마 개혁적이라는 오바마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테러와의 전쟁’이 아니라 ‘핵 테러와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1차 핵안보정상회의 직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추진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이를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1차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열린 미중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 중 하나는 이란 경제 봉쇄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결국 핵안보정상회의와 ‘핵 테러’에 대한 대응의 진정한 본질은 부시가 말했던 ‘테러와의 전쟁’의 오바마 판인 것입니다.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말한 것처럼, 오바마는 ‘핵 테러 대응’을 말하면서 이란과 북한에 대한 공격과 경제제재의



사진 출처: 미해군

2010년 7월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군사훈련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정당화하는 회의다.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된 국가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미국과 핵 협정을 맺은 인도는 초청됐고, NPT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도 초청됐지만, NPT에 가입했고 IAEA 사찰도 받는 이란은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되지 않은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이러면서 핵안보정상회의가 NPT 체제를 보완한다는데, 이런 위선이 또 어디 있습니까?

둘째, 물론 가장 큰 위선은 핵안보정상회의 그 자체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들이 모여, 핵무기를 어떻게 제대로 없앨 것인지의 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핵안보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셋째로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과 핵발전소에 대한 방어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더한 위선이지요.

인류가 실제로 겪은 핵 테러가 지금까지 몇 번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미국이 떨어뜨린 핵무기입니다. 이것이 핵무기의 유일한 사용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핵 선제공격을 포기한 바가 없습니다.

히로시마

그리고 인류가 겪은 핵 테러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각국 정부들이 그토록 안전하다고 선전하는 핵발전소에서 벌어진 사고들입니다. 바로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사고고, 체르노빌 사고고, 1차 핵안보정상회의와 2차 정상회의 사이에 벌어진 후쿠시마 사고입니다.

핵발전소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후쿠시마 사고에서 드러났습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본은 다르다, 한국은 다르다’ 하고 말했지만 후쿠시마에서 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를 폐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핵발전소를 재개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스리마일 사고 이후 수십 년간 중지됐던 핵발전소 건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고가 일어난다고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하고 말하며 핵발전소를 수출하려 혈안이 돼 있습니다. 얼마 전 UAE와 핵발전소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인도에도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고 한·인도 핵협정까지 맺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핵안보를 걱정한다면 모든

핵물질을 없애야 합니다. 정말 핵안보를 걱정한다면 전 세계에 있는 핵물질을 모두 모아서 안전한 납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

핵발전소를 없앨 때만 핵 테러로부터 진정으로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후쿠시마 핵 사고의 교훈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핵발전소 사고를 겪고 나서야 이 교훈을 깨닫겠습니까.

핵안보정상회의의 진정한 목표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핵안보를 명분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군사적·정치적 패권을 유지하고, 이란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정당화하려는 회의입니다. 또, 핵발전소를 더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핵발전소에 면죄부를 주려는 회의입니다.

이런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우리는 분명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3월 25일 집회와 행진으로 결집하자!

3월 26~27일에 서울에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북핵은 공식 의제가 아니다’ 하는 거짓말과 달리 오바마와 이명박 정부는 이 회의를 대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

미군은 걸프전에서 사용한 대형 정찰기 ‘조인트 스타스’를 투입해 이틀간 북한의 지상 병력을 감시하겠다고 했고, 3월 말에는 미군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가 각각 2천5백 명씩 참가하는 대규모 상륙훈

련이 실시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한과 이란을 겨냥해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물질 통제를 강화하는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더 나아가 “핵테러 의심이 있는 국가나 조직에 대한 금융제재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압박은 전 세계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 경쟁을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진보진영은 핵안보정상회의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또 핵안보정상회의, 제주 해군기지 등을 이용해 안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이런 투쟁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언론 노동자 파업 등 다양한 부문의 투쟁과 결합돼 더 광범한 정치 투쟁에 기여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집회가 예정된 25일에 민주노총 결의대회

와 민중대회가 열리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이 집회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여 준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한편, 대항행동 내 일부 NGO들은 아쉽게도 핵안보정상회의의 ‘반대’를 분명히 하거나 정부의 행진 불허 방침에 맞서 거리에서 투쟁하기를 꺼리고 있다. ‘민중의 힘’ 참가단체 일부가 이를 문제 삼아 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의 계획과 일정을 무시하

며 분열을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현명해 보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핵안보정상회의의 반대를 위한 투쟁을 강조하는 것은 옳다.

가장 좋은 것은 진보진영과 시민사회 단체가 힘을 모아서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하는 대중투쟁과 위력적 행진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방승 파업 등과 연결시켜 투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호중



핵안보가 아니라 핵없는 세상
핵안보정상회의의 규탄
공동행동의 날

일시 : 3월 25일 오후 1시 / 장소 : 서울 도심

한미FTA폐기! 핵안보정상회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한반도 평화실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MB퇴진! 오바마 방한 반대!

2012 1차 민중대회

일시 : 3월 25일 오후 3시 / 장소 : 서울 도심

